第284回國會 (定期會)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錄 第 7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9年11月16日(月)

場 所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10년도 예산안(계속)
   가. 외교통상부 소관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외교통상부 소관(국제교류기금)
3. 공청회 개최의 건

審査된案件

1. 2010년도 예산안(계속) ····· 1
가. 외교통상부 소관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1
가. 외교통상부 소관(국제교류기금)
3. 공청회 개최의 건 ····· 7
1. 2010년도 예산안(계속) ····· 8
가. 외교통상부 소관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8
가. 외교통상부 소관(국제교류기금)

(10시28분 개의)

○위원장 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국회(정기회) 제7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0년도 예산안(계속)

가. 외교통상부 소관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외교통상부 소관(국제교류기금)

○위원장 박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외교통상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장관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4일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본인 관광객 8명을 포함한 10명이 숨지고 6명이 중화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참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 자체가 매우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찾은 여러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희생이 돼서 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비극적인 사고로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2010년 외교통상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잠깐 의사진행발언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박선영 위원님.

○박선영 위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위원입니다.

일본은 1952년도 4월에 발효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우리가 흔히 대일강화조약이라고 약칭해서 부릅니다마는 이 조약에 영토반환 목록에 독도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영유권 주장을 지속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 일본의 고위관리, 옛 문서를 접근할 수 있는 제한된 관리로부터 입수한 법령에 따르면 이미 일본은 해방 직후에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법과 법령 그리고 대장성 고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간단히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외통위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은 패전 이후에 재산 문제를 종결하고 또 그 영토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채무·채권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이라는 것을 법률 제7호로 만들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일곱 번째로 일본이 만든 법률에 따라서 회사경리응급조치법시행령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대장성이 고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위법령이라고는 하는데 이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동 시행령 그리고 대장성 고시가 똑같은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화 21년, 우리로 하면 1946년이 되고요. 1946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하고 딱 1년이 되는 해에 일본 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엄청난 액수의 배상 그리고 노무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무 등의 해결을 위해서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을 제정·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제가 오늘 복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대장성 고시 제 654호로 일본 영토가 아닌 것을 그러니까 포지티브 형식이 아닌 네거티브 형식으로 일본의 영토를 규정을 하게 됩니다. 앞에 조선, 대만, 관동주, 남양군도 이런 것들을 앞에 적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의 독도, 죽도라고 이들은 지금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독도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지금까지 국제법적 대응 강화사업으로 수십억 원을 사용해 왔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18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자들의 논리나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런 아주 직접적인 문건과 법령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고 찾아내는 작업을 외교부가 저에 이어서 바톤을 받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와서 이것 좀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영 위원님이 이번에 발견하신 대장성 고시, 대단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독도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관련된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위원장께서 적절하게 조의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 서울에 앉아서 느끼는 것과 일본 현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느끼는 충격과 감도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침 어제 일본에 갔다가 오사카에서 돌아왔는데요. 어제 일요일 아침, 전 방송 그리고 전 신문, 아사히·마이니치·요미우리에 시커멓게 일면 톱으로 나와 있는 '한국 부산 참사 방인 8명 사망' 저도 이게 무슨 기사인가 하고 오사카 공항에서 충격적으로 그 뉴스를 봤는데요.

아마 어제 오늘 일본 국민들은 이 사건에 온통 충격과 함께 슬픔에 잠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보고도 청취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외교부장관께서 외교부에서 파악한 내용과 그리고 조치사항, 또 관심 표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온두라스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26살 한지수 씨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감옥에서 온 편지, "나는 살인범이 아니에요"' 하는 내용이 방송에 탐사보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두 달 전에 온두라스 감옥에 수감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징역 30년형을 구형받고 있는 다이빙강사 한지수 씨의 억울함에 대한 호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우리 정부가 한지수 씨에게 너무 멀리 있고 어떤 도움도 안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호소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파악한 내용과 또 한지수 씨가 억울하지 않

도록 어떻게 조치를 해 왔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위원회 회의를 계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진 부산 사격장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 경찰과 행정당국에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서 화재의 원인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포함한 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온두라스 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 위원님의 이 내용이 방송에도 나왔지요? 그래서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신데 외교통상부에서 이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이 내용을 나중에 정리되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2010년도 외교통상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뒤로 미룰 게 아니고 간단한 내용이니까 일단 보고를 듣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진 예, 장관 설명하시면서 같이 해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정동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토요일 오후 부산 사격장 화재로 많은 일본인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로서도 진상규명을 최대한 조속히 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또 이것을 일본 정부에 사건전모를 신속히 파악해서 통보하도록 노력 중입니다. 이 기회에 저 자신도 외교통상부장관으로서 피해 유가족, 특히 일본인 희생자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외교부로서는 사건 발발 즉시 주한일본대사관에 이러한 사고 발생 및 일본인의 희생 소식을 신속히 통보하고 또 소방방재청과 협조해서 일본 측에 최대한 협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사교민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대책반을 즉시 설치를 했고 지금 현재는 심의관이 현지에 출장을 가서 사건수습에 일본 측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2차관 신각수차관이 주한일본대사하고 통화를 했고 제가 싱가폴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장관대리 자격으로 주한일본대사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건이고 해서 지금 정동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부로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전모를 파악해서 일본 측에 통보하고 사건을 수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박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독도 관련 자료 일본 대장성의 고시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이것은 일본이 행정관할권의 지리적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함으로써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뒷받침하는 좋은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은 확고부동하며 이러한 논리를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그 중의 하나가 이와 같은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해서 우리의 논리를 보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박선영 위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정동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온두라스 내 재판 진행 중인 우리 국민 한지수의 보호 문제입니다. 이 분은 인터폴 적색수배에 의해서 지난 8월 27일 이집트에서 체포된 후 9월 23일 온두라스로 이송이 돼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외교부로서는 온두라스의 사법관할권을 존중하는 가운데서도 한지수 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본부는 물론 주온두라스대사관을 통해서 온두라스 관계 당국에 수차례에 걸쳐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관심을 표명하고 또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1차 용의자인 로스라는 사람의 신병확보가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관계 국가인 네덜란드 호주에 대해서 동인의 신속한 신병확보를 위해서 협조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체적인 진실 확인 차원에서 법의

학자 수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을 온두라스에 파견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하여간 이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부로서도 모든 관심을 갖고 온두라스 당국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 가면서 또한 한지수 씨 가족, 변호사에 대해서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우선 마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예, 말씀하시지요.

○정동영 위원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해서 한지수 씨의 경우에 지금 다이빙강사 자격증을 따러 1년 전에 온두라스에 갔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때는 잘 마치고 왔는데, 두 가지 문제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1년 뒤에 이집트공항에서 인터폴 수배로 해서 체포가 됐는데 그때 적절하게 조력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이 가족의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온두라스로 이송이 돼서 투옥되어 있는데 30년 징역형을 구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혐의를 받고 있는 범인은 보석으로 나온 뒤에 출국해 버려서 지금 신병확보가 안 되어 있고 공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는데 본인이 설명하는 상황에 따르면 억울한 정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 영사가 신원보증을 서주게 되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해서 신원보증을 받지 못했고, 현재 온두라스는 국내 정정이 대단히 불안하고 또 인터넷에 올라 있는 온두라스의 감옥을 보게 되면 거의 원시적인 수용소 형태로 아주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어느 날 갑자기 해외공항에서 체포돼서 억울한 혐의를 뒤집어쓰고 이 같은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지금 절규를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 정부의 존재가, 국가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고 외교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 공관에서, 영사가 신원보증을 서서 불구속상태에서 억울함이 없는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유명환 장관님 의견을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알겠습니다. 그것은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도록 공관이 신원보증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마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론이 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구속 당시의 법률적인 조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상황을 좀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것을 유념하시면 좋겠어요.

미국 여기자 2명이 징역 12년형 실형을 받았잖아요? 전직 대통령까지 파견해서 그 두 사람을 구출해 오지 않습니까?

지금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온두라스 감옥에 있는 한국인 한지수 씨를 생각하면 저는 우리 정부가 즉각적으로 뭔가 대응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외교통상부에서는 지금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정동영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선영 위원님, 같은 건입니까?

○박선영 위원 예, 이따가 전체 질문 시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사전에 나왔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집트나 온두라스가 모두 비엔나 영사협약에 가입한 나라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선영 위원 그러면 영사적 보호가 의무가 있지 않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인을 면담하고 필요한 영사적인 조력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런데 사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1998년도에 인도네시아 폭동 났을 때 교민 대피 우리 참 소홀히 했어요. 그리고 2001년에 중국에서 한인 사형수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중국으로부터 통지도 받지 못했고 구명 운동은 더더욱 하지 못했고요. 2004년에 김선일 씨 피살 사건, 그다음에 2009년 현재까지도 약 1300명 이상의 재외국민이 다른 나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국제법상으로 보면 재외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해당 국가의 영사들한테 있는 것은 아마

장관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자국민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번에 한지수 씨 사건만 하더라도 이집트에서 온두라스로 후송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네덜란드 경찰이 같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후송하는 것 그다음에 심지어 그 비행기가 경로도 아닌데 암스테르담을 경유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은 네덜란드가 자국민의 보호에 얼마나 주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스웨덴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이런 곤욕을 치르게 되었을 경우에 외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자유가 구속되는 경우에는 조사, 재판, 통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와 편의시설을 대사관이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우리 외교부의 온두라스 한지수 씨에 대한 배려, 법적의무 이행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부족했다라는 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뒤에 전체 질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질의 시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우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외교통상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심의 받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2010년도 예산 심의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의 기초가 되는 2010년도 우리 외교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외교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안보를 공고히 하는 외교, 또 G20 등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외교, 그리고 선진국 진입을 위한 경제·통상 외교, 주요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 강화 외교, 또 더 큰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국격(國格) 제고 외교, 재외국민 보호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외교 등 여섯 가지 외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안보를 공고히 하는 외교정책 분야입니다.

정부는 북한 핵을 불용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안보리 결의를 계속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시한 포괄적 해결방안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의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서 5자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한반도 주변 4국과의 관계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는 동맹 미래비전을 바탕으로 6·25 전쟁 발발 60년을 맞아 동맹 미래비전의 내실 있는 이행을 통해 양국 관계의 외연을 확대하고 동맹관계를 심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한일 관계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해서 하토야마 신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그리고 양국 외교·국방 당국 간 고위급 교류와 연락체제를 강화하고 또한 통화스와프 확대 등 실질 경제협력 관계도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서 북한 핵 문제 등에 있어 러시아 측의 건설적 협조를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협력과 극동 시베리아 개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3대 신실크로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G20 등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외교 분야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련 예산과 준비조직을 확충하고 주요국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서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로

서 G20의 제도화 논의와 세계 경제위기 대응과 또한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 모색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내년 4월 중순 핵안보 정상회의, 워싱턴에서 개최됩니다만 이 회의에서 건설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한미 원자력 협정의 미래지향적 개정을 포함해서 한미 간에 원자력 분야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 온실가스 감축 등 국력에 상응하는 선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POST-2012 기후변화체제 협상에서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는 동시에 저탄소녹색성장 외교도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경제·통상 외교 분야입니다.

정부는 개방과 자유무역을 통해서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미, 한·EU FTA의 조기 발효를 추진하면서 걸프협력이사회, 호주, 뉴질랜드, 페루와의 FTA를 조속히 타결하도록 노력하고 콜롬비아와의 FTA 협상을 조속 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WTO/DDA 협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핵심이익을 반영하고 2010년 타결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자원부국과의 호혜적 협력 강화를 통한 에너지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요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 강화 외교 분야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양자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아시아와 세계 각국으로 확대해 나가는 소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외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미일 또 한·중·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2010년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아시아 외교 내실화를 위해서 아세안 등 중점 협력 대상 국가들과의 실질협력 관계를 심화시키는 한편 아세안+3, EAS—동아시아정상회의입니다—APEC, ASEM 등 지역 협력 분야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EU와의 자유무역협정과 최근 개정한 기본협력협정 발효를 통해서 한·EU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한·아랍소사이어티,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 한·아프리카 포럼을 더욱 활성화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더 큰 대한민국의 구현을 위한 국격 제고 외교 분야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에 걸맞는 기여외교를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고 성숙한 세계국가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 확대 설치를 통해서 아프간 안정화와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PKO 규모를 확대하고 국회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칭 PKO 참여법 제정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 PKO 파병에 관한 절차를 법적·제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계기로 2010년을 ODA 선진화의 원년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민총소득 대비 ODA 규모를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하고 2011년 원조효과고위급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해 선진국형 글로벌 이슈 문화사업, 한류의 확산과 쌍방향 문화교류의 병행 또 한식 세계화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재외국민 보호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외교 분야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사전 예방체계와 함께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부와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후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제도 등 재외국민 보호제도를 내실화하고 재외국민 보호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의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사증면제협정 체결 등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규모도 확대하는 동시에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선진국형 외교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통상부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외교통상부는 경쟁력 있는 전문 외교인력 양성을 위해서 가칭 외교아카데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외교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서 외교관 충원 및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선진국형 외교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향후 5년 내 단계적으로 외교인력 1000명을 증원하고 2012년까지 외교통상부 예산의 정부예산 비중을 1%로 상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외교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외교통상부 예산안은 외교 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글로벌 코리아를 구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1.9%가 증가한 1조 5708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1.2%가 증가한 122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2010년도 외교통상부 예산안 개요에 관해서는 저희 부 임재홍 기획조정실장이, 2010년도 국제교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임성준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이 각각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임재홍 실장 또 임성준 이사장 보고하시기 전에 저희가 의결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의결사항을 먼저 상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의결정족수 됐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이미경 위원 위원장님!

공청회 개최……

○위원장 박진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프간 관련이지요? 나중에요.

우리 위원회 일정과 관련해서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해서 먼저 처리하기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

3. 공청회 개최의 건

(11시03분)

○위원장 박진 의사일정 제3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청문회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현재 회부되어 있는 2건에 대해서 공청회 개최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외국민보호법안에 대해서 지금 각각 공청회 개최 안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청회 개최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진술인 선정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간사 위원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공청회 개최 계획(안)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이미경 위원 방금 우리 위원회가 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어서 매우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지난 28일 외교통일·국방 장관과 국정원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여한 외교안보조정회의를 통해서 아프간에 PRT(지역재건팀) 130여 명 또 보호병력 300여 명 이상을 파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외교부에서 이용준 차관보를 팀장으로 아프간 TF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늦어도 내년 3, 4월 이전에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고 3, 4월이 되면 군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우리 국민 450여 명이 아프간에 재파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국회에서의 토론이라든지 국민적인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러한 절차가 매우 생략된 채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간 현지가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이고 지난 달 미군 사망자수가 55명이고 8년이

지난 전쟁기간 동안 최대 사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미국의 단 한 차례의 공식요청도 없는 파병을 자발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각국이 아프간 전쟁의 실패를 인정하고 다국적군의 철수도 고려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우리가 다시 재파병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물론이고 또 민주당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따져 봐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상임위원회가 공청회를 연다면 첫 번째는 재파병의 명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무엇 때문에 파병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프간 전쟁에 대해서 유엔·미국·파병국 기타 국제사회의 평가가 어떠한지, 철군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아프간의 정치적·군사적 정세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PRT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PRT가 군인지 민간인지 민군인지 구체적인 활동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보다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지면서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외통부장관께서는 저를 비롯해서 위원들에게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래서 이러한 공청회를 적어도 수차례는 열어야지 제대로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파병 과정에서 심각한 국론분열이 초래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사상자가 날 경우에는 이후에 굉장한 국론분열과 혼란이 초래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무 부서인 외통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공청회를 통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하는 점에서 시급히 공청회 개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진 또 의사진행발언 특별히 하실 분 안 계시지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PRT, 지방재건팀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군파견 문제는 이것이 PKO, 평화유지군이 아니고 국제안보지원군으로 하는 거지요, 만약에 파병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소관주의 원칙으로 보면 국방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PRT, 지방재건팀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청회를 실시한다면 PRT 확대 설치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공청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병력을 파견하게 되는 것은 전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재건팀의 보호를 위한,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한 목적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외통부의 소관은, PRT를 설치하게 된 배경 목적 조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사항이 되겠고 그것을 보호하는 병력은 PKO가 아니기 때문에 소관을 엄격히 따지자면 국방위원회 소관 업무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 이 건에 대해서는 여야 교섭단체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셔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실시 제안은 오늘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각 교섭단체별로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공청회 실시에 대한 의견을 위원장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재홍 실장이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해서 일단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원님들께서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충환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0년도 예산안(계속)

가. 외교통상부 소관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외교통상부 소관(국제교류기금)

(11시11분)

○위원장 박진 그러면 임재홍 실장 보고하십시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2010년도 외교통상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책자 2010년도 외교통상부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안 기본방향입니다.

장관님께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2010년도 총세입은 2009년도 대비 21.2% 증액된 1228억 원이며 2010년도 총세출은 2009년도 대비 21.9% 증액된 1조 57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특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4대 전략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대 전략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자면, 첫째 국제 기여외교 확대, 둘째 글로벌 네트워크 외교 추진, 셋째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넷째 글로벌 코리안 활동 지원 구축입니다.

2010년도 예산의 주요 제도개선으로서 그간 국회에서 지적된 수입대체경비 과소계상 및 용도외 집행 문제를 시정하였으며 재외공관 현지인 행정원 운영제도 및 외교활동비의 명칭, 구조 및 운영을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여권발급 및 영사 업무 수수료 수입 예상액을 올려 잡아 2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2009년 대비 21.9% 증액된 1조 5708억 원으로서 인건비 2456억 700만 원, 기본경비 2632억 3900만 원, 주요 사업비 1조 300억 29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 사업별 내역입니다.

2010년도 주요 사업비로 10개 신규사업과 68개의 계속사업 등 총 78개의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10쪽에서 1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 13개의 프로그램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상외교 프로그램은 의전장실 주요 사업 예산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131억 5500만 원으로 2009년 대비 소폭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자관계 협력 예산입니다.

다자관계 협력 프로그램은 국제기구국, 정책기획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조약국 사업 예산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114억 9700만 원으로 2009년 대비 75.4%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을 구외교활동비에서 분리 및 증액하여 독립 편성하고 테러대응체제 강화 및 국제안보협력 및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쪽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입니다.

2010년도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액은 2009년 대비 42.4% 증가한 3655억 2000만 원입니다.

대폭 증액된 사유는 2010년 상반기까지의 PKO 분담금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22쪽 지역외교 프로그램 예산입니다.

지역외교 프로그램은 6개 지역국 주요사업 예산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102억 6800만 원으로 2009년 대비 223.6%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중남미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북·미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예산이 증액되었고, 한-아세안 센터 지원 등 신아시아외교 추진 예산이 신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쪽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예산입니다.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문화외교국, 대변인실, 정책기획국 사업 예산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21억 9700만 원으로 2009년 대비 58.7% 증액되었습니다.

외교홍보역량강화사업 예산은 1억 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글로벌 인적인프라 구축,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선정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재외동포보호 및 지원 예산입니다.

재외동포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은 재외동포영사국 사업 및 재외동포재단 출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231억 1600만 원으로 2009년 대비 8.9%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대체경비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외국

민영사서비스 지원 사업 및 금번에 분리 편성된 재외국민보호 사업을 각각 10억 6100만 원, 21억 200만 원 증액하고 재외국민 선거기반 구축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출연 예산은 소폭 감액하였고, 한인의 날 행사 사업은 재외동포재단으로 이관하였으며 웨스트(WEST) 사업을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하여 워킹홀리데이 이행 사업만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여권업무 선진화 예산입니다.

여권업무 선진화 프로그램은 여권발급 및 전자여권발급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여권업무 선진화 프로그램 예산액은 785억 1500만 원으로 2009년 대비 11.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경제통상외교 예산입니다.

경제통상외교 프로그램은 통상교섭본부 사업 예산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102억 5100만 원으로 2009년 대비 49.5% 증액되었습니다.

FTA 후속조치 및 한미 FTA 비준을 위한 활동 등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후속조치 사업을 22억 9600만 원 증액하였고, 통상투자진흥 외교강화 사업 예산을 6억 9400만 원 증액하는 등 6개 사업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개도국 원조 예산입니다.

개도국 원조 프로그램은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 및 개발협력국 예산으로 2010년도 예산은 4270억 7000만 원으로 2009년 대비 19.4%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액은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원조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의 증액내역은 프로젝트형 사업 및 초청연수 등 양자 지원이 12.6% 증액되어 2925억 원이고, 국제기구 협력이 22.9% 증액되어 215억 원, 이라크·아프간 재건지원 등 평화구축 지원이 117.8% 증액된 475억 원, 마지막으로 홍보정보화 등 협력사업 지원이 22% 증액된 180억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예산입니다.

동 프로그램은 외교안보연구원 사업으로 2010년도 예산은 78억 5100만 원으로 2009년 대비 23.6%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글로벌코리아 미래전략 기반 네트워크 강화 예산을 11억 43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국내외 교육훈련 예산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쪽 재외공관 운영 예산입니다.

재외공관 운영 프로그램은 기획조정실 사업 예산입니다.

156개 재외공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및 시설개선에 관한 사업으로 2010년도 예산은 4323억 5900만 원으로 2009년도 대비 7.1%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 예산에는 대테러 특별 경호·경비 및 보안시설 강화 예산을 39억 1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재외공관 현지인 행정원 역량강화 예산을 100억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외교통상 행정지원 예산입니다.

외교통상 행정지원 프로그램은 본부 인건비·기본경비 그리고 기획조정실 주요사업으로 2010년도 예산은 1570억 7400만 원으로 2009년도 대비 9.4%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외교정보전용망 구축 및 외교통상정보시스템 등 정보화 예산이 46억 3900만 원 증액되고 재외공관 주요행사비를 49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특사파견, 에너지·녹색성장 외교 강화 예산을 증액하고 대한민국 외교사료집 편찬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예산입니다.

2010년도는 319억 5000만 원으로 2009년 대비 27.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국고채무부담행위입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은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 국유화를 위한 예산으로 2010년 신규사업으로 주베트남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주불가리아대사관 관저 매입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외교통상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준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국제교류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내역에 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입니다.

배포해드린 2010년도 국제교류기금운용계획(안)

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자료에 나와 있는 1, 2페이지의 기금운용계획 기본방향 설명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금운용계획 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국제교류기금의 총 운용 규모는 859억 8700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265억 원이 줄은 23.6%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줄게 된 이유는 저희가 투자한 투자금 회수 중에서 여유자금 운용으로 작년에는 500억을 운용했는데 명년에는 300억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541억 8700만 원과 기금예탁이자수입 18억 원, 여유자금회수 30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의 내역은 국제교류기금의 운용수익에 따른 재산수입 86억 원, 국제교류기여금 모금에 의한 경상이전수입 435억 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지정기부금수입 20억 원을 반영한 20억 5000만 원입니다. 여유자금회수 300억 원은 금융상품으로 예치된 국제교류기금 중에서 내년, 10년도에 만기가 도래하여 회수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문화홍보외교 및 국제교류는 한국학기반확대, 한국전문가육성, 인사교류, 국제협력네트워킹, 문화교류, 미디어 사업에 지출하는 예산으로써 09년도 대비 5%를 감액한 418억 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사사업 간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서 기존 사업을 재편성해서 신규 단위사업인 국제협력네트워킹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주로 정책연구와 민간단체지원, 포럼·지역협력 개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외동포보호 및 지원 사업비는 재외동포재단에 지원되는 것으로써 명년도에 221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195억 원에 비해서 26억 3500만 원이 늘어나서 13.5%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외교통상 행정지원 항목인 재단의 기금운영비는 주로 재단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써 98억 69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8.7%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운용은 12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입계획의 여유자금회수 300억 원 중에서 사업비로 충당하고 남는 것은 통화금융기관에 재예치될 예정입니다.

2010년도 국제교류기금운용계획의 상세한 사업별 내역은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4쪽에서 7쪽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국제교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외교통상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미 정부 측으로부터 개요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4쪽의 주요 검토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외교통상부 소관 예산안은 무상원조 예산, 순수외교 사업비, 재외공관 운영예산 등의 증가로 인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800여억 원 정도가 증가하여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9년도의 0.66%에서 0.78%로 확대됨으로써 외교부 예산의 정상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 온 수입대체경비 편성에 있어서의 연례적 과소계상 문제와 수입대체경비의 용도 외 집행 문제를 일부 시정하고, 재외공관 현지인 행정원 운영제도를 정비·확대 하였으며 외교활동비의 성격에 맞지 않아 지적을 받아오던 탈북자 관련 예산을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하면서 그 예산액을 증액하는 등의 제도개선 노력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사업은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항목에 편성되어 있고 사업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 사례도 있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기준이 일관성을 결여한 경우도 발견되는바,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쪽의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 진출 지원 예산입니다.

동 사업은 국비로 파견되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 제도를 활용하여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기구 전문인력을 육성하려는 것으로, 2010년도 동 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예·결산 심의 및 국정감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유엔 분담금 기여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JPO 파견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2010년도 신규 예상 파견인원은 예산 확보 부족으로 인해 예년 파견 수준인 5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최대 2명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JPO 파견은 국제기구 사무국 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가능케 하고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며 국제기구 진출자들의 근무경험을 국내 유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장관의 유엔사무총장 진출 이후로 우리 국민의 유엔사무국 및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JPO의 파견규모와 소요예산을 종전보다 크게 확대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더욱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2쪽의 전자여권 제조 및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여권 제조 및 개선 사업은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여권발급의 보안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도 동 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690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예산 산출과정의 비합리성과 예산액의 과다계상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동 사업 예산안에는 여권수수료 납부방식 개선비용이 신규로 19억 17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동 비용은 그동안 현금 결제만이 가능하였던 여권수수료 납부방식을 개선하여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소요되는 신용카드 수수료 지급비용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전자여권 제조관련비용 및 여권세입 예상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2010년도 전자여권 예상 발급 건수를 310만 건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전자여권 수수료 납부방식 개선비용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여권 예상 발급 건수를 540만 건으로 계상하고 있어 예산 산출기준에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권발급 건수는 2008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09년의 경우에도 11월 현재 여권발급 건수가 254만 1700건에 불과하여 2008년 365만 7600건에 비하여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540만 건이라는 수치는 여권발급 건수가 최고치에 달했던 2007년 465만 건에 견주어 보더라도 16%가량 높은 수치일 뿐 아니라 경기침체 및 최근의 여권발급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과다계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역시 310만 건이라는 수치는 전자여권 제조관련 비용 및 여권세입 예상액과 관련한 예산 당국과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최종심의 결과가 결정되었으나, 이와 같이 최소 예측치에 근거하여 전자여권 제조관련 비용 예산이 조정될 경우 세출예산의 부족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의 지출이라는 과거에 지적된 관행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수치 또한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가 LG CNS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2010년도 여권발급 건수는 약 419만 건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건수를 419만 건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전자여권 수수료 납부방식 개선비용은 14억 8800만 원이 되고 현재의 예산안 금액인 19억 1700만 원과는 4억 29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요약컨대 예산 당국과의 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여권발급 건수 310만 건과 전자여권 수수료 납부방식 개선비용으로 계상된 540만 건은 모두 합리적인 근거에서 도출된 수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교통상부가 기이 실시한 LG CNS의 연구용역 결과 산출된 예상 여권발급 건수인 419만 건에 기초하여서 관련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16쪽의 글로벌 코리아 미래전략 기반 네트워크 강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글로벌 거버넌스 중심국가 진입을 위한 미래 외교전략 수립 및 협력외교 네트워크 강화와 북핵 문제 해결 및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11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 내용 중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은 외교안보연구원의 기존 사업인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및 외교안보연구원 기본경비를 통해 이미 일부 이루어지고 있어 외교안보연구원의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 할 것이므로 기존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만한 차별성과 사업목적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하여 비용 대비 효과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바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등 기존 사업의 내용을 확대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연구조사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22쪽의 국제교류재단 해외사무소 운영의 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독일, 베트남 등 6개 지역에 6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미국 사무소에는 2명이 파견되어 있으며 나머지 5개소에는 파견원 1명씩이 각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일본한국문화원의 한국어 보급, '말해보자 한국어' 행사와 2008년 국제교류재단 동경사무소가 추진한 '한국어말하기대회'가 유사성을 갖는 등 국제교류재단 해외사무소의 업무가 다른 정부기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제교류재단은 향후 업무상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 기관업무의 장점을 살려 국가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동경, 베를린, 모스크바, 북경, 호치민 등 5개 해외사무소는 각각 대사관 내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 워싱턴 사무소의 경우 대사관 외부에 독립적으로 사무소를 설치하여 매년 5만 4000불을 사무실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바, 국제교류재단은 이미 2010년도 1월 1일부로 워싱턴 해외사무소를 분리하여 워싱턴과 LA에 각각 1명씩의 주재원을 파견하되 주미대사관 및 LA 총영사관 내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예산을 절감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여전히 기금운영비 5만 4000불이 워싱턴 사무실 임차료로 편성되어 있는바 해외사무소 설치계획과 예산편성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당초의 계획대로 워싱턴과 LA에 해외사무소를 각기 운영하기 위해서는 워싱턴 사무실 임차료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한 분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당의 박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천 위원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PRT 주둔 예정지 세 곳이 교전지역으로 대단히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파병을 할 경우에 교민들을 전원 철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네 가족, 9명이 있습니다마는……

○박상천 위원 일하는 직원들 포함해서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 정부 프로그램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소위 카불에 있는 교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일부는 바그람 기지 내에 있는 우리 PRT 일부……

○박상천 위원 아니, 철수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은 거기로 이전을 해서 영업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철수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지금 아프간 34개 주 중에 31개 주에 여러 나라의 PRT가 주둔하고 있는데, 이미 안전한 지역은 다른 나라에서 다 선점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미설치 3개 주는 님로즈, 다이쿤디, 카불주인데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다른 나라

가 설치하고 있는 곳을 우리가 인수해서,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여러 개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수하는 방안도 함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아프간 파병이라고 간단히 말합시다, 길게 설명하면 시간 가니까. 장관께서는 전에 아프간 파병하면 인명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말한 적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국방장관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각오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과 함께 검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진 위원장, 김충환 간사와 사회교대)

○박상천 위원 그래서 이 문제, 아프간 파병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국회 토론 과정에서 많은 그런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리고 가사 파병을 하더라도 그 시기를 서둘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간 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를 했고요. 또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아프간에서 8년 동안 있었지만 거기 계속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물론 카르자이 정부의 부패 문제와 연관된 이야기지만 출구전략을 시사한 것으로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추가 파병에 대해서 CNN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는 42%고 반대가 56%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아시아 순방이 끝난 뒤에 재논의키로, 아프간 전략을 재논의키로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출구전략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프간 파병의 타당성 여부를 공청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가사 거기에서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보더라도 그 시기는 미군의 증파 결정 등 아프간 전략이 본격적으로 실행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서둘러 파병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박상천 위원님 제기하신 여러 상황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면밀히 그것을 주시하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다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리고 한미 FTA 말이에요, 한덕수 주미대사는 '내년 봄에 한미 FTA가 비준되지 않으면 내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선거 앞둔 시기에 논란이 있는 이슈를 종결하는 것은 미국에서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내년 봄에 이것 비준이 안 되면 내후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 하반기에는 중간선거 때문에 이 문제를 본격 제기하지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가급적이면 금년 말부터 내년 3월 이내에 이 문제가 처리가 되도록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서 산토리홀 연설을 통해서도 그런 아시아의 중요지 또 대외무역의 중요한 그런 점을 강조했고, 한미 FTA에 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진전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박상천 위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반드시 이 문제 언급하세요. 의안에는 정식으로 들어 있지 않던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 논의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정상회담에서 이게 언급이 되지 않고 심도 있게 논의가 안 되면 우리의 강도가 약한 것으로 오인될 염려가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국제협력단 총재 오셨어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박대원 예.

○박상천 위원 튀니지를 갔더니 여직원 1명이 ODA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박대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천 위원 1분……

그래서 어떻게 혼자 그 방대한 업무를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 파견 나온 사람 중에 도우미를 한 사람 지정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ODA를 늘리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2015년에 0.25%까지 올리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인원을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박대원 답변드립니까?

○박상천 위원 하나 더 물을 테니 한꺼번에 대답하세요.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기업의 인원을 일률적으로 10% 줄이겠다고 그러는데 국제협력단도 이것 줄이겠다고 그럽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박대원 답변드립니까?

○박상천 위원 예.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박대원 지금 공기업 축소 방향하고 관련해서 KOICA도 10% 인원을 줄였습니다. KOICA에서는 튀니지에 서미영 직원이 나가 있는데 튀니지와의 개발협력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지금 인력 사정상 튀니지 대사관 직원들과 합심일체가 돼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사무소가 별도로 나가서 일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상천 위원 기재부에서 10% 줄이는 것에 국제협력단도 해당되느냐고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박대원 예, 해당됐습니다. 지난번에 벌써 10%를 줄였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러면 업무는 늘어나는데 인원은 줄어드네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박대원 예, 그것을 장기적으로 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와 노력해서 인원을 적합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진영 위원 유명환 장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해외공관을 가 보면 예산이 안 와서 집세를 밀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예산을 좀 많이 늘려서라도 그런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21.9%가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번에 이렇게 대폭는 것은 아까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린 대로 유엔 국제기구 분담금의 밀린 돈을 갚기 위해서 2000억 이상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다만 집세뿐만 아니고 고용한 월급도 제때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주로 예산이 달러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환차보전이 제때 안 이루어지고 맥시멈 70%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진영 위원 그래서 집세 밀린다거나 이런 개인적으로 봐도 수치스러운 그런 일은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그래서 외교부 예산은 많이 늘렸으면 하는 게 개인적 생각입니다마는 그래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차츰 시정하기로 하고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제일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는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면 그 예산안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엉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먼저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되고 이 예측이 자꾸 빗나가면 예산안 자체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아까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수입대체경비를 너무 과소편성해서 몇십%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꾸 딴 데로 쓴다든지 또 정상회의 참가 및 총리순방 사업 있지 않습니까? 또 금년은 작년에 비해서도 10.6% 감액된 것으로 돼 있어요. 매년 정상회의 참가 및 총리순방 사업 집행현황 보면 2005년부터 2009년 9월까지 평균 74.3%를 예비비에서 갖다 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출예산을 차이 나게 잡는 것 자체도 신뢰가 떨어질 뿐 아니라 예비비를 힘있는 사람이 갖다 쓰면 그 자체로 안 좋은 거예요. 힘있는 사람이야 예산 편성할 때 다 힘으로 잡게 돼 있는데 예비비마저 힘있는 사람이 가져가면 힘없는 사람 뭘로 씁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로 예산 편성이 전년도 6월경에 다 그림이 잡혀져야 되는데 이 정상회담이

라는 게 다자 정상회담은 대체로 결정이 돼서 다 반영을 했는데 양자 정상회담의 경우는 상대방하고 합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1년 전에 확정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비비의 의존도를 줄이는가 하는 게 저희들로서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진영 위원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고 예비비를 자꾸 높은 사람이 갖다 쓰면 안 돼요. 그것은 어려운 사람이 갖다 써야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진영 위원 그다음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환율을 1230원 기준으로 했는데 제가 금요일날 보니까 환율이 1160원이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예측하기는 내년도 환율은 1186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로 따지면 환차익이 314억 정도가 나는데 이것 국고 반납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그 문제가 제일 기재부하고 문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집세뿐만 아니고 고용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그것은 환차가 나면 환차를 전액 보전해 준다면 환이익이 나면 또 전액 반납하는 게 당연한데 그것을 맥시멈 50%, 70% 이상 보전을 안 해 주니까 또 환율이라는 게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어느 정도의 마진을 두고 잡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재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그래서 환차손이 나건 환차익이 나건 전액 보충을 하고 전액 국고에 반납을 해야……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거니까 국회에서도 그 점을 강하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위원 이 부분도 정상으로 돌아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KOICA 총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아시지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박대원 예.

○진영 위원 우리가 사회적 기업법을 만든 지가 한 2년, 시행한 지가 2년 좀 넘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상당히 활성화돼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돼야 될 부분이지만 외국에서, 우리가 특히 도와주고 있는 그 나라에서도 활성화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KOICA의 ODA 사업과 사회적 기업을 연계시켜서 국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과 같이 ODA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조하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사회적 기업을 도와주고 키워 주는데 원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박대원 지금 국제협력단에서 근래 PPP 사업이라고 금년도부터 활성화할 예정으로 지금 KOTRA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우선 해외에 나가 있는 KOTRA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현지의 기업들 또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 양국 간의 기업들을 연계시켜 주는 발굴사업을 내년 초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 원조 트렌드가 PPP 사업에 주로 많은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국제협력단에서도 내년부터는 사회적 기업을 양국 간에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진영 위원 유명환 장관님께, 이것은 예산 관계가 아닙니다만 궁금한 것 하나를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면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자회담 당사자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중요한 주제니까 다음에 한번 더 자세히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지난번 외교부에서 아프간 파병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재건팀을 현재 25명 수준에서 80명으로 증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계 및 보호 병력을 280명 내지 300명을 파견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아프간에 파견돼 있는 PRT 요원이 정확하게 몇 사람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 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SF(Internal Security Forces)에 구성된 전체 인원은 7만 1000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박주선 위원 아니, 지금 PRT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요원 수가 몇 명이냐는 말이에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는 25명에서 금년 말까지 80명으로 바그람 기지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별도로 설치가 되면 토털 한 150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중에 군의관이 6명인가가 파견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KOICA 협력 요원으로 파견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우리 헌법에는 해외에 병력을 파병하려면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일 지휘체제를 갖는 그런 병력의 파견이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파견되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박주선 위원 아니, 개인 자격이라니 군인이 어떻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자원봉사자, 그것이 병역대체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박대원 잠깐 국제협력단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역대체요원으로 의료진들이 2년간 파견을 나갑니다. 병역요원이 아니고 병역의무대체요원입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헌법에 파병을 하게 되면 병역대체요원이 됐든 무슨 공병대원이 됐든 군의관이 됐든 해외 파병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박대원 이 사람들은 병역 입대……

○박주선 위원 아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박대원 군에 입대할 사람들인데 군에 입대하는 대신에 해외 자원봉사를 하게 됩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현역 군인이 아닙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박대원 현역 군인이 아닙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러면 군의관이 아닌데 왜 군의관이래요?

○박주선 위원 지금 군의관이 파견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박대원 군의관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박주선 위원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이?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박대원 군인은 아닙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에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박대원 예, 병역을 해야 될 사람들이……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답변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KOICA 이사장이 그것을 군의관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았는데, 저도 병력이 파견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군의관이 아닙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박대원 아닙니다. 봉사요원입니다.

○박주선 위원 그다음에 외교장관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PRT 요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활동의 성과로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PRT 요원을 증원해야 하는 배경이 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지난번 국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프간의 재건 지원은 국제사회의 의무라고 말씀드린 것은 2001년에 처음으로 ISF가 창설될 때 유엔안보리 만장일치 결의에 의한 것이고 매년 그런 결의가 지속돼서 모든 회원국이 물적·인적 및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8일에도 그런 안보리 결의가 있었고 우리가 세계 10위권 국가로서 지금 아프간에 지원하는 금액이 전체 지원액의 0.17%, 1000분의 1 좀 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성과는 뭐가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을 해 나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아프간 지원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박주선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들 수 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직업훈련센터를 통해서 현지 인원을 훈련을 시키고 또 학교 건설 및 학교 지원을

하고 병원 의료 지원을 해서 현지 사람을 돕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렇다면 지금 PRT 요원을 130명 규모로 확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아프간 정부나 또는 미국이나 기타 유엔에서 우리나라에 증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아프간 정부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유엔안보리 결의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다는 점을 제가 외통위에 보고를 드렸고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게 말이지요, 샘물교회 선교단이 아프간에서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하다가 우리 귀중한 생명을 두 사람이나 잃고 그런 이후에 우리가 파견돼 있던 부대를 철수를 했고 앞으로 파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지 사정에 어떤 변화도 없고 우리 군인이 가든 민간인이 가든 간에 신변에 매우 위험을 느끼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특히나 알카에다 조직을 분쇄하고 빈 라덴을 체포하겠다고 그래서 시작된 8년간의 아프간 전쟁이 테러 조직을 분쇄하지도 못하고 많은 인명만 살상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알카에다 조직이 중동을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 암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프간에 파병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이 매우 위험스럽게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수립이 돼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저희들도 그러한 재외국민의 테러 위협의 증가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걱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고 관계국과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사실, 팩트와 다른 게 샘물교회 이후에 우리가 동의·다산 부대를 철수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 사건 이전인 2007년도 연말에 동의·다산 부대를 철수할 계획이 있었고 그 사건 때 연말까지 철수하겠다고 확인한 것이고 또 다시 파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당시 선교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발표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국민에게 발표를 그렇게 안 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안 했습니다. 청와대의 발표문을 제가 찾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것을 읽으면 빼 주든지 그래야지 시간 다 가 버리면……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죄송합니다. 그렇게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제가 여쭤 본 이유는 지금 외교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몇 개 국가들이 아프간에 전투병을 파병해 달라 또는 전투병이 아니라도 국군 파병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을 하는데 명분이 없고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우니까 PRT 요원을 증원을 한다, 그래서 그 PRT 요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경비하기 위해서 군병력을 파병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위장을 하는 국군 파병이 아닌가 이것을 묻고 싶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박주선 위원 다시 말하면 PRT 요원을 많이 파견하게 되면 그만큼 신변보호를 하기 위한 병력이 수반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많은 국제 지원군이 일부는 전투, 일부는 재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가서 전투도 하고 재건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프간 현지에서도 여러 가지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미국이 정책 방향을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하면 전투는 미군이 할 테니까 나머지 국가들은 지방재건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는 얘기를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 그래서 터키 같은 경우에도 군인보다는 민간인을 중심으로 보내서 반반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새로운 접근입니다.

우리는 민간인이 주로 지방재건사업을 하고 다만 병력은 그것을 보호하는 자위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휘서에도 교전을 위한 전투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자위를 위해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아프간 정부와도 그런 기초적인 방향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감사합니다.

○박주선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충환 1분 다 쓰셨는데……

그러면 1분만 더 하시지요.

○박주선 위원 우리 재외동포재단이사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재외동포들 중에서 아직 현지에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생활고를 겪으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주재국으로부터 사회보장을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우리 재외동포들의 많은 숫자가 아프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전연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재외동포재단법 사업 내용에 의료지원사업도 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재외동포들이 생활고로 인한 의료 혜택을 전연 받지 못하는 아주 비인도적인 상황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포재단에 와서 많은 동포를 접하면서 특히 후진국에 있는 동포들의 어려운 실상을 봤을 때 절감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안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적극적으로 관계 자료라든가 지원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박주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의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의화 위원 장관님이 안 계시니까 우선 KOICA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우리 박 총재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며칠 전에 IPPF의 질 그리어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IPPF 아시지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박대원 예.

○정의화 위원 이것이 과거에 우리 가족계획을 성공시켜 준 아주 중요한 국제기구 중의 하나인데 제가 말씀을 들어 보고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 KOICA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961년에 우리나라가 가입해서 여태까지 IPPF,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겠는데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가족계획연맹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지금 모자건강까지 다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원 받은 총 액수가 2828만 달러 정도 돼요.

그런데 사실 61년도의 달러하고 지금 달러는 천양지차니까 이것은 총액 기준을 가지고는 얘기가 되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우리가 엄청난 도움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족계획이 성공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분들의 도움인데 아마 작년에 IPPF가 우리나라에 지원해 준 게 13만 불을 지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IPPF에 지원해 준 돈이 한 7만 9000불 정도 돼요. 이것이 환율 때문에 그러는데 한 8만 불 잡으면 여전히 우리가 한 5만 불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이 과거 우리가 1961년부터 도움을 받은 당시에 비하면 이제 우리가 공여국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에는 아마 보건복지부하고 대한가족협회 이런 데에서 지원해 줬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KOICA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빈국들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성공 경험 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소프트웨어 이런 것을 전수하고 그 역할을 INGO가 하게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가 국정감사 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오늘 아울러서 IPPF, 국제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우리 KOICA의 지원을 요청드리고 이번 예산에 이것을 조금 포함하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박대원 존경하는 정 위원님께서 이 분야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PPF는 국제가족계획연맹인데 우리 한국이 옛날부터, 6·25 전쟁 이후로 전 세계에서 가족계획에 가장 성공을 시켜준 단체가 바로 이 IPPF입니다.

작년에 이분들이 와서 이제 개도국을 위해서 한국이 좀 기여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작년에 30만 불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의화 위원 30만 불 지원이 됐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박대원 예, 작년에 30만 불 지원이 됐습니다.

○정의화 위원 그런데 그날 질 그리어 사무총장

이 저에게는 그 이야기는 들려주지 않았는데 그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관계자들께서 가족연맹하고 서로 연락해서 예산에 조금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박대원 예, 감사합니다.

○정의화 위원 그리고 이제 장관님께서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오늘 아침에 의사진행발언으로 나온 이야기이고 또 위원장도 말씀이 계셨지만 국제적으로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바로 제 지역구 부산 중구 국제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우째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해서 제가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만……

특히 내년 2010년에서 12년 3년이지요. 3년간 한국 방문의 해라고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한국 방문의 해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건 정말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불감증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안전대책에 대한 수립 없이 이런 한국 방문의 해를 구두로만, 구호로만 내세우면 될 것으로 생각해 온 이런 아주 편의적이고 정말 고식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는 이 국제적인 망신을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예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장관님께서는 주무장관이 아니시지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문화관광하고 다같이 좀 의논을 하셔서요, 물론 행안부하고 다같이 해야 되겠지만 외국 가이드로 인해서 외국인이 오는, 관광객들을 가게 하는 그러니까 방문하게 하는 그런 전국의 관광지들을 말이지요, 이번에 사격장 같은 거,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저는 그런 게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만 그런 모든 것을 점검을 해서 안전대책을 점검하는 그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만 그렇게 되도록 우리 유명환 장관님께서 관계 장관들과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우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하토야마 총리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본인 희생자 신원확인, 보상, 그 사고 수습 또 유족지원 여기에 우리 외교부가 최일선에서 예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사건이 우리 양국 간의 외교 마찰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그게 보니까 대인보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보험에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제가, 1분 더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외교부 예산 0.66% 이것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이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교력 강화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번에 힐러리 국무장관이 주도해 가지고 미국에서 4개년 외교발전 재검토를 하면서 500억 달러의 예산 규모를 증가시켰지 않습니까? 이와 유사하게 우리도 이제는 매 5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5년 정도의 플랜을 짜서 매년 그것을 다시 보완·수정 해 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서 이게 뭔가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특히 제가 그동안에 주장해 왔던 외교 인력의 2배 증원 그리고 예산 10년 내에 1.5% 보장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봐서도 10년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5년 내로 할 수 있는 그런 플랜, 왜 그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면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관계되는 부분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순방이……

제가 1분만 더 쓰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주선 위원하고 같은 예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아직,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지금 정상회담이나 총리 방문의 횟수가 제가 볼 때 연 한 10회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로 쓰는 관례를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수교국에 공관을 증가시키는 예산이 제가 오늘 여기 봐서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바라고요.

그리고 좀더 그런 미래계획을 가지고 공관도

좀 확대해 나가고 국유화사업도 각 나라의 지금 부동산 가격의 추이 같은 것을 분석해서 괜히 시기를 놓치면 쓸데없이 엄청난 돈을 버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끝으로 한중우의공원, 흑룡강성 해림시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기념관 한 2억 정도의 PC센터를 설치하는 데 좀 지원을 하도록 장관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평소에도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님이 외교부의 조직, 예산, 인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국회에 차원에서 그런 위원회도 개최해서 많은 관심을 촉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외교부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참 부산의 그런 방화로 인해서 일본인이 희생된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점검, 안전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안전불감증 이것은 국민적인 캠페인을 해서 이러한 의식을 계몽하고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신원확인 또 대인보상 문제도 검토해서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로서도 저희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하신 외교부 예산이 0.66%에서 0.7%로 올라갔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5년 이내에 1.5%, GNI 대비 1.5%로 증액된다면 더 말할 것 없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인원·예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외교 인프라를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지지 또 성원을 바탕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공관 증설 설치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저희들이 외교부 자체로서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정부 전체의 TO를 관할하는 행안부하고 또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하고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외교부 자체로서는 공관 설치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이것을 증설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유화사업도 내년 예산에는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흑룡강성의 PC센터 2억 지원 문제는 저희 예산뿐만 아니고 정보진흥원, 행안부 산하에 있는 해외정보진흥원에서 IT 갭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해외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한번 가능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화 위원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에서 제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다녀와서 질의를 해서 장관께서 관계관에게 지시까지 하셨는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다음에는 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위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첫 순방길에 올라서 한국에 오시게 되지요, 오게 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18일 저녁으로 그렇게 알고……

○박선영 위원 정상회담의 의제가 지금 어떻게 확정이 돼 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선 지난 6월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워싱턴……

○박선영 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미래동맹 비전에 관한 것, 북한 핵 문제, FTA 이런 순서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FTA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선영 위원 뉴스위크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줄 선물이 아무것도 없다, 그저 미소만 띤 채 정중하게 요청, 리퀘스트(request)만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CNN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소개하면서 연이틀 계속 중국하고 일본만 얘기를 하고 한국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워싱턴포스트는 일본보다도 더 아주 중국만 부각을 시켜서 한국은 쭉 빠져 있고요.

14일자 워싱턴포스트지는 1면 톱으로 그 기사를 중국만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이렇게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FTA 그다음에 북·미 대화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한미 간에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박선영 위원 그런데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전부 이렇게 한국에는 줄 선물도 없고 게다가 주요 언론들은 한국이 순방지라는 사실조차도 빼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각에서 나왔던 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목적이 오로지 주한미군 격려용이다 이런 말들만을 하고 있습니다.

실속 없이 그랜드 바겐이라는 용어 자체에 지지를 표하는 식의 그런 뒷수습용의 레토릭(rhetoric)에 그치는 한미 정상회담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사하셨지요?

장관께서는 대사를 지내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선영 위원 대사의 요건이 뭔가요? 어떤 사람이 대사를 해야 하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해도……

○박선영 위원 대통령하고의 의중 교감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외교력과 경륜과 외교적인 전문지식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뭐 그렇게 추상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 시대에 어떤 목적 어떤 방향으로 외교를 끌고 가실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4강 대사들이 전부 비 외교관 출신, 비전문 외교관 출신이 됐는데 외교부 내에 반발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우리가 4강 외교의 중요성이기 때문에……

○박선영 위원 아니, 그냥 반발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없습니다.

○박선영 위원 전혀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굉장히 관용적인 부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대사들 인사할 때 장관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그분들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하십니까 아니면 청와대에서 내려오면 그대로 액셉트(accept)를 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외교부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건의를 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선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4강 대사도 장관께서 아래 분들하고 다 의논해서 천거를 한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협의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박선영 위원 지금 현안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봐서 적임자를 추천을 한다고 하셨는데 러시아가 자원주식회사입니까? 러시아가 자원만 중요한가요? 에너지국가일 뿐인가요, 우리에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지는 않지요.

○박선영 위원 않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게 얘기하면……

○박선영 위원 당연히 그게 아니지요.

CEO 출신의 대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어느 정도의 전리품을 나누어 줘야 할 대사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중국이라는 나라, 지금 미국은 어떤 사람을 주중대사로 임명했는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중국 전문가예요, 자타가 공인하는 중국 전문가이고 중국어에 아주 능통하고 중국 사람을 딸로 입양을 해서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단순히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리전문가가 가는 것하고, 정말 외교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격이 올라가겠습니까? 국가브랜드가 향상이 될 수 있다고 정말 생각을 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런데 외교는 위원님도 동의하시겠지만 여야가 없는 분야이고 이렇게 정부가 인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그런 어떤 폄하를 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폄하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적임자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의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그 판단은……

○박선영 위원 더구나 중국은 경륜 특히 관계, 꽌시(關系)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나라인데 이런 대사 발령을 할 때 과연 외교부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재외국민 참정권 실시하고 관련해서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어서 대사관까지 나와서 투표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교통망이나 도로가 잘되어 있는 곳도 그러한데 중국처럼 열악한 상황에서는 여권 하나를 발급받기 위해서도 하루 와야 되고, 또 특히 동북3성 같은 경우에는 심양 총영사관이 얼마나 격무에 시달리는지 잘 아실 겁니다. 신청하는 데 꼬박 줄서서 하루 해야 되고 돌아가는 데 하루 해야 되고 총 3일을 허비해야 하는 이런, 또 찾으러 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참정권을 시행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현재 우리 교민들의 대외 업무, 영사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동북3성에는 심양이 아닌 다른 곳에 영사관이 설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사관 설치하려면 주재국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고 현재 중국하고 대한민국의 관계에서 볼 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일본은 우리하고는 교민 수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공관을 유지하면서 출장주재관사무소라는 이름으로 대련이나 다른 여러 곳에 이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중국하고 협의를 해서 동북3성에는, 예컨대 길림시라든지 장춘시라든지 하얼빈이라든지 연길이라든지 우리 교민이 많이 살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재외교포들의 사건사고도 많은 이런 지역에는 적어도 일본 정도의 출장주재관사무소—이것 영사관 분소를 만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그런 것 정도는 충분히 배려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도를 해 볼만 한데, 아까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외공관을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너무 액수가 적은 상황에서 쪼개 쓰시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만 재외국민 보호는 우리 헌법의 명령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첫째 재외국민 보호, 둘째 재외국민의 참정권 시행을 앞두고 그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박선영 위원님께서 재외국민 보호 또 참정권 관련해 가지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출장주재관사무소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대련에 설치하는 문제를 중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좀더 여러 군데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대련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고 하지만 우리 교민들은 동북3성 일대에 많기 때문에 그쪽에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동북3성도……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다음은 정옥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委員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건팀, PRT 역시 유엔 결의하에 지금 추진되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PRT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나라가 모두 몇 개국이나 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42개국입니다.

○鄭玉任 委員 PRT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의 대부분이 실제로 전투병을 파병하는 나라도 있고 또 PRT의 보호를 위해서 파병을 하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대부분이 전투보다는 자기의 PRT 자체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결국 유엔 결의하에 국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아프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재

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PRT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위적인 조처로서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목적이 파병이 아니고 PRT, 민간재건팀을 보호하는 자위적인 것입니다.

○鄭玉任 委員 그다음에 아프간, 지금 PRT라든지 파병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마다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 미국과 연동해서 생각하는 의견이 많습니다만 실제로 아프간은 대 테러전의 일환으로서 유엔이 주도하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 뉴스에 모 기업이 공격을 받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모 기업이 도로건설에 임하는 S기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표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마지막 케이스는 그 직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鄭玉任 委員 이 기업의 경우는 이미 완공한 도로도 있고 지금 건설 중인 도로도 있고 또 앞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는 도로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업의 경우에 정부가 독려해서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정부와 관계없습니다.

○鄭玉任 委員 결국은 아프간 재건사업의 일환으로서 이 기업이 일종의 수주를 한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래서 지금 건설현장에 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기업들이 나감으로써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이 더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鄭玉任 委員 사실 PRT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PRT는 2001년 아프간 사태 직후에 해서 200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鄭玉任 委員 이미 박상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유엔 주도하에 국제공동체가 참여하는 사업이었다면 우리도 좀더 일찍이 참여를 했으면 지금 겨우 남은 3개 지역 중에 한 지역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가 하고 있는 PRT를 하지 않고 좀더 안전한 지역으로 갈 수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래서 제가 장관께 특히 촉구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렇게 국제공동체가 대의명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내 여론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국내 여론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진출하는 것이 사실은 먼저 파견하는 병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더 안전하다라는 현실적인 요인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鄭玉任 委員 4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비단 NATO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 NATO 회권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비 NATO 회원국도 상당수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입니다.

○鄭玉任 委員 그리고 이미 우리가 다산·동의부대를 파병했다가 철수한 예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샘물교회 선교단 사건이 하나의 동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런데 철군 결정은 샘물교회 납치사건 이전에 확정됐던 계획입니다.

○鄭玉任 委員 그런데 보통 그렇게 파병을 하고 철군한 예가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많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거의 없습니다.

○鄭玉任 委員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그다음에 뉴질랜드의 경우를 보면, 뉴질랜드가 미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 아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鄭玉任 委員 NATO 회원국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鄭玉任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로 며칠 전에 주한 뉴질랜드대사를 만났더니 전투병까

지 파병했다고 오히려 아주 자랑스럽게 자긍심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 인식의 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의 차를 좁혀 주는 것도 외교통상부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좋으신 지적입니다. 우리가 OECD 회원국이 됐으나 OECD 국가 중에서 병력을 파견 안 한 나라는 한국, 일본, 스위스, 멕시코 네 나라밖에 없습니다.

○鄭玉任 委員 일본의 경우는 자위대가 가지는 일본 헌법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기존의 20억 불 지원에서 50억 불 지원으로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10억 불을 5년 해서 50억 불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다음 한미 FTA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 의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무선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의견이 교환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로서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번에 싱가포르 APEC 기간 중에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했고 거기서도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오면, 현재 이것은 정치적인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레벨에서의 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鄭玉任 委員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이것은 결국 최고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관련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내년 봄이 지나면 현실적으로 미국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선거가 주는 영향력 때문에 사실 내년 봄까지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될 타임라인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해서 재협상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없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다음에 지금 한국과 EU 간에 타결된 FTA가 미국의 조야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미국 제조업계, 미국 상공회의소도 그럴 경우에 미국이 25만 개 이상의 잡(job)을 잃을 염려가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행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한·EU FTA가 발효되는 것과 동시에 미국도 FTA를 발효시키지 않을 경우에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미시간주라든지 일리노이주 외 다른 주의 정치인들도 잘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미국의 공화당·민주당 의원들이 국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들은 한결같이 한국에서 빨리 FTA를 비준 통과해 주면 자기네들이 미국에서 FTA를 설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러한 강력한 촉구를 하고 갔는데요.

미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답변하실 수 있는 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얼마 전에 미국 상·하원 공화·민주 양당 88명의 의원이 연서로 한미 FTA의 조속 비준의 필요성을 행정부에 촉구한 바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미국 상공회의소, 제조업계 이런 모든 단체에서도 조속히 FTA를 비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특히 자동차 노조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3일 전에 워싱턴포스트 사설에 아주 강하게 한미 FTA의 중요성과 한미 FTA를 조속 통과시키지 않으면 미국이 아시아에 있어서 고립될 것이다, 영어로 레프트아웃(left out)될 것이다 하는 점을 강하게 했고 또 파이낸셜타임스에도 비슷한 논조로 기사를 게재했고 해서 지금 모든 업계나 이런 데서도 다 한미 FTA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캠페인 때 언급한 것 또 노동조합을 지지기반으로 해서 당선된 점 이러한 정치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미국 국내정치의 문제이고 또 국내정치의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다음에는 민주당의 문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최근 아프간 현지에 가 있는 우리 기업이 세 차례인가 공격을 받았잖아요, 탈레반한테인가요? 그런데 그게 한국 정부의 아프간 재파병 결정 발표 전후 해서 있었는데 방금 장관

님께서는 한국 정부의 발표와 연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근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3건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2건은 저희가 그런 것을 공론화하기 훨씬 이전에 발생을 했고 마지막 1건은 바로 직후에 일어났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탈레반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장단체 6명, 10명……

○문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탈레반이거나 알카에다거나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추정을 해도 틀리지 않잖아요?

어쨌든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현지 상황이 개전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미국이 공식적으로 아니면 정식으로 우리 정부에 재파병을 요청해 온 적이 없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없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재파병을 결정하는 이유가 뭐지요? 다시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너무 늦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너무 늦었다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우리가 금년 2월에도 실사단을 파견했었고 그리고 작년에 바그람에 PRT를 확대하는 문제를 결정해 놓고, 한 85명까지 확대하는 계획이고 지금 건설공사 이런 것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서둘렀다는 것보다는 너무 지연돼 가지고……

○문학진 위원 장관님, 내가 서둘렀다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 전에 국회 외통위 회의에 장관께서 나와서 별 계획이 없는 것처럼 답변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프간 재파병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랬다가 며칠 후에 정부가 발표를 했단 말이지요. 외교통상부가 발표를 했지요?

나는 이런 매우 중요한 사안이 공식 발표되는 과정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이런 것을 공론에 부쳐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여러 차례 하든지, 아까 장관께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러셨지요? 분명히 그러셨지요? 그런 과정들을 밟는 게 적절한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문학진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실은 우리가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공론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을 발표한 후부터 지금 공론화를 밟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 보안을 지킨 것은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기도 전에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장관님께서는 이 문제가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해서 공론화 과정에 들어가는 단계이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래서 오늘 우리 당의 이미경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국회에서 심도 있게 다각적으로 차분하게 공청회 등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동의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국민적인 동의를,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런데 아프간 상황이 제가 지난 6일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제2의 베트남화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 것 장관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게 안 되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진 위원 그런데 이미 상황이 그렇게 아주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이거지요. 아주 진흙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공통된 분석입니다.

더더군다나 심각한 것이 정말 베트남하고 비슷한 게 그때 남베트남 정권이 매우 부패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미군 무기 뒤로 빼돌려서 팔아먹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제 우리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프간 정권, 카르자이 정권의 부패 또한 그에 못지않다, 매우 부패했다, 그래서 아프간 국민들 눈에는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아프간 재건사업에 투입된 외국 군인이든 PRT든, PRT 맞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프간 국민들이 선의로 봐 주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부패한 카르자이 정권을 그냥 돕는 것이다 이렇게 비쳐지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 가지고 탈레반이 경찰로 위장침투해서 다국적군한테 총을 쏘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지요.

이런 상황인데, 미국은 군 증파에 대해서 아직 결정도 안 했지요? 지금 고민 중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조만간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학진 위원 그런데 한국 정부가, 아까 장관님께서는 한국 정부는 서두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아프간 전쟁 아닙니까?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정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게 급히 들어가야 할 이유가 꼭 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미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3월에 아프간 정책을 발표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지원을 요청했고, 해서 아프간 증파 여부는 미국의 군사적인 판단 여부지 미국의 아프간 정책은 확고부동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일본 또 중국 이런 나라들이 경제적 지원만 하고 있지요? 일본은 일본 헌법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지금 경제적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더 확대를 해 가다가, 그러다가 미국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아프간 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파병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는 너무 늦었다고 자꾸 강조를 드리는 것이 일본은 헌법상의 그런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거기에 응분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6·25전쟁 때 많은 외국군이 와서 희생을 치러서 오늘날의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국제사회 문제에 대해서 모른 체할 수는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건 본회의 때 총리가 답변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네요. 그런데 최근에 주아프간 미국대사가 오바마 대통령한테 미군 증파를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그게 반대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카르자이 정권이 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 파병 반대에 포커스(focus)가 간 것은 조금 정확치 않다고 생각……

○문학진 위원 그런데 그 썩은 정권이 하루아침에 그게 제대로 잡히겠어요, 지금까지 잘 안 됐는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다고 지금 카르자이 정권을 버리는 것도 과연, 선택의 옵션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학진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참으로 미국 등이, 미국 등이 발을 잘못 담근 잘못된 전쟁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잘못 시작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이 전쟁에 한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진흙 구덩이에 들어갈 이유가 있는지 매우 회의적이고요. 조금 이따가 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문제는……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이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정말 촘촘하게 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주 좋으신 지적이에요. 저도 존경하는 문학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기회에 감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그 반대하는 국가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미국·일본, 뭐 서방국가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현주소는 이 서방 쪽에 뿌리를 두고 있고…… 지금 중국하고도 미국이 아프간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중국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력을 파견한 건 아니지만.

이런 탈레반 무장세력이라는 건 우리가, 중국은 물론이고 모든 국가의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힘을 합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뿌리가 그걸 반대하는 세계 국가에 있는 게 아니고 찬성하고 지지하는 쪽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먹고살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국제사회의 의무를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학진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긴 얘기는 따로 하기로 하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장관님 얼마 전에 베트남 급히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문학진 위원 아프간전쟁이 지금 제2의 베트남화 하고 있다 이게 전문가들의 거의 공통된 분석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트남전쟁에 대한 장관님의 평가는 뭐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문학진 위원 다른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베트남전쟁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고 이 아프간전쟁은 그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전쟁이 아니고 소위 9·11테러, 알카에다를 보호하고 있는 탈레반 또 이런 테러와의 어떤 투쟁, 전쟁이지 그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전쟁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공청회 때 반드시 장관님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청회를 한다면 제가 나가서 답변해야 되겠지요.

○위원장대리 김충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위원 오전에 야·여당 위원님들에 의해서 아프간 파병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예산하는 날이지만 일단은 이 문제가 아주 중대한 만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장관님, 우리가 지금 아프간에 파견 겸 파병하려는 게 독자적 기지 재건입니까, 아니면 기존 점령군이 주도하고 있는 재건 기지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현재 바그람에서 하고 있는 PRT를 별도로 우리가 주를 하나 이렇게 맡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송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독자적 기지 재건이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PRT라는 게, 기존의 PKO 활동의 순수 민간자원활동이나 이런 것하고 달리 점령군이 주도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PRT 성격은 기존 순수 자원활동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송영선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데가 빨간 표시로 해 놓은 님로즈, 다이쿤디, 그다음에 카피사 이 세 군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게 미국 측이 제안한 곳인데, 보시다시피 저 80%라는 게 뭐냐 하면 2008년 1년 통계를 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평균 한 번 이상 탈레반의 공격이 발생한 지역이 저 분홍색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 지역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고, 만약 저기가 아닌 파르완주에 있는 바그람으로 우리가 한다 해도 역시 탈레반 출현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히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도, 파견이나 파병이 타국보다 늦었다는 이유 때문에 안전지역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위험한데 이 지역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누리스탄하고 쿤나르를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해 놓은 것 보이시지요? 저 누리스탄이 소위 말하는 알카에다 전투가 가장 빈발한 지역으로, 동시에 오사마 빈 라덴이 지금 은둔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누리스탄에 있는 미군 군수 보급로가 막혀 가지고 미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급로가 막힌 것도 결국 탈레반에 의해서 막혀졌는데, 만약에 겨울이 지나도 미군이 저기에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지역은, 결국

누리스탄에 있는 탈레반들이 카피사로 연결되고 그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있는 것이, 카피사 밑에 동그라미 있는 게 수도 카불입니다. 그래서 카피사, 카불, 그다음에 파르완주 이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 아프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칫 우리가, 1993년부터 지금까지 아주 짧은 역사지만 16년 동안 굉장히 혁혁한 PKO 공헌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아르빌이나 또 동티모르나…… 저는 동티모르도 가봤습니다, 서부 사하라 마찬가지로. 이곳처럼 아주 평온한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민간인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꾸 외교부에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여기서 허락을 하지만 결국 가는 인력은 국방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민간인 한 사람당 두 사람 비율로 가는 경비병의 소총을 장비한 그 수준, 자위수단의 방탄 능력으로는…… 최근 탈레반들이 이라크에 출몰했던, 도로매설 폭탄 기술이 더 발달되어 가지고 저기에 쓰고 있고, 이 경비병의 자위수단으로서는 도로매설 폭탄을 탐지할 수도, 예방할 수도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경비병 수준의 장비로는 사실 민간인 경비는 고사하고 경비병 자신의 안전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저는 좀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파병은 하자, 저는 파병은 하자입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하되, 세 가지를 꼭 명심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저 도로 가운데, 갈색 동그란 반원선 저게 메인 도로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서 하는, 파르완을 가거나 카피사를 가거나 심지어 님로즈를 가도 가장 우리가 해야 될 핵심적인 일이 도로 건설, 그다음에 다리 건설 이런 겁니다. 물론 일반 건설업체가 가기도 하지만 저는 민간인 파견은 절대 반대입니다.

대신에 동티모르에도 공병이 가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줬습니다, 제가 동티모르 같이 가 봤기 때문에 아는데. 또 보병이 가 가지고 소위 말하는 방위 역할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프간에서 군이 싫다 하더라도 공병·보병을 보내는 쪽으로, 또 설사 그렇게 보내더라도 파견되는 병력의 자위수준을 일반 아르빌이나 동티모르 수준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이번에 PRT는 종전의 PKO하고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겁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프간의 상황이 상당히 정세가 좋지 않고, 그래서 다만 우리가 보내는 것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투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자위를 할 수 있는, 거기에 따른 편제와 무기, 장갑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실제로 활동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에 많은 고심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직접 인원과 병력을 보내기 전에 그러한 검토를 지금 당지(當地) 나토군 또 미군, 아프간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비는 지뢰 및 기습공격에 안전한 소위 MRAP라고, Mine Resistant……

○송영선 위원 지금 미군이 MRAP를 쓰는데 MRAP가 가격이 워낙 비싸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에이브람스 전차조차도 탈레반들이 쓰는 매설 폭탄에 이게 종잇조각처럼 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송영선 위원 오전 질문에서 다른 위원께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절대 찬성했는데 저도 국제사회에 기여, 우리도 소위 말하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공헌을 해야 된다는 정신에 대해서는 절대 동감을 하지만 PKO, 지금 아프간 사정에 대한 충분한 인식 없이 그냥 무조건 보내자……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송영선 위원 아주 편하게 가야 된다 이것은 아니니까 정말로 장비에 대해서 특별한 신경을 써 가지고 인적 구성을 새로 해 달라는 것을 다시 제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송영선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예산이니까, JPO 문제인데 이 예산이 지금 더 줄었다라는 게 납득이 안 가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참 아주 안타깝습니다.

○송영선 위원 또 2점 몇%를 하면서, 우리보다

더 적은 퍼센티지를 내면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에는 40명, 50명씩 보내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진짜 형편없는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서면으로 다 답변을, 질문 끝나고 난 뒤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면이 아니고.

그다음에 테러대응체제 강화, 이번 신규사업 10개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 많은데 테러대응체제 강화에 있어 가지고 배정될 예산이 보니까 한 공관당 한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 생색내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는 대테러 정보수집이 도저히 안 되겠다, 완전히 새로 좀 짜라……

그다음에 신아시아 외교 추진에 50억을 편성해 놓고 44억을 한·아세안센터 지원에 쓰는 것도 이것 편법 예산편성이 아니냐, 또 그다음에 글로벌 인적 인프라 구축도 마찬가지로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왜 여기에서 별개로 6억을 편성하는가, 그다음에 전자여권 제조는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불필요하게 여권 만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선비용에 4억 얼마가 더 되어 있고 또 편차가, 외교통상부에서는 내년에 310만 명이 여권을 새로 신청한다는데 우리 국제교류재단에서는 330만 명을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전에 예산 짜기 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덜 된 것 같은데, 거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먼저 JPO 예산은, 저희 목표는 한 10명을 신규로 보내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적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산 당국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기존의 5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지고 이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도 좀 증액을 결정해 주시든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예결위를 통해서도 저희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증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러대응체제 강화는, 이것은 어차피 테러 위협이 큰 그런 몇 개 공관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예산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선 위협 수준의 평가를 통해서 소수 공관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테러대응체제 강화에 대해서도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아시아 외교 중에서 대부분 아세안센터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세안센터가 금년 초에 개소가 되어 가지고 아세안 열 나라에 그런 우리의 외교력을 좀 집중한다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대부분의 예산을 아세안센터 활동 지원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권 발급 관계는 산정기준이 좀 서로 다른데 그것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간선, 400만 건 정도로 해 가지고 아마 평균치를 내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하여 현재 미국 내부의 분위기는 오바마 정부 출범 초기와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뭐 꼭 긍정·부정보다는 지금 행정부의 입장은 이것을 하겠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자동차 노조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미국 상하원 의원 88명이 공개적으로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고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런 점이 또 워싱턴포스트에서 그저께 사설을 통해서 아주 강한 그런 지지표명을……

○윤상현 위원 그런데 최근에 론 커크 USTR 대표가 한미 FTA 비준을 위해서는 한국의 자동차 시장의 개방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게 한미 FTA 추가 협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런데 그러한 얘기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국이 구체적으로 뭐를 원하

는지, 무엇이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제시가 없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래도 혹시 미국 측에서는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까지 자동차 문제를 대표적으로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고 여러 관리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단지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래도 우리 측에서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어떤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선 상대방이 뭐를 원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김종훈 본부장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한미 FTA 비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 내년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또 예정되어 있으니까 선거를 앞두고 노조와 대립하는 그런 행동을 임박해서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내년 3월 이전에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리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오늘 조간신문에 보면 미국산 자동차를 10% 내려도 우리 소비자들이 안 산다는 의견이 73%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있었거든요. 이 기사는 보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봤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이 여론조사에 담겨진 의미를 근거로 한다면 차라리 추가 협의를 통해서 자동차에서 일부 양보를 하고 우리가 미국 측에 더 양보를 얻어내자는 의견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여론조사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이런 의견이 제기되면 한미 FTA 비준도 조기에 실현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기본적으로 그러한 기사는 우리의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사가 어떤 배경에서 어떠한 이유로 게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잘못하면 또 비관세장벽, 우리가 다른 나라의 비관세장벽을 비판하는, 그런 것을 또 우리가 비판받는 그러한 논리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적절치 않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그런 기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 2010년도 6자회담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예단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도록 지금 관계 각국이 다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당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상현 위원 일단 북·미 양자회담이 한 12월 초 정도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미국이 연내에 미·북 접촉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북·미 양자회담이 잘 되어야 6자회담도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일단 북·미 양자회담의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미 양자회담이라는 것이 어떤 협상을 하기 위한 회담이 아니고 북한을 6자회담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미·북 접촉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북한이 북·미 양자회담을 하면 6자회담 복귀에 예를 들면 대북 제재 해제라든지 핵군축회담 이런 등의 어떤 조건을 내걸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제재 해제는 미국이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가시적이고 불가역적인 그러한 비핵화 조치가 따르지 않는 한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북·미 양자회담에서 6자회담 복귀에 대한 조건을 내걸 것이고 그러면 북·미 양자회담이 결렬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북한을 제외한 5개국과 다시 협의를 할 것이고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일단 미국에 양보를 주문할 것이고 일본은 이에 비해서 미국에게 강경한 대응을 주문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정부 입장이 가장 난처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미국 간의 양자회담 결렬에 대해서 대비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혹시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미·북 회담을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차원으로 보는 데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은 북한에 불리합니다.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지금 5자가 다 이행을 충실히 하고 있고 5자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이 거기에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오히려 북한 쪽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저는 6자회담은 아마 5자가 단합된 입장을 계속 취하는 한 북한이 회담에 복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리고 예산 문제인데요, 장관님. 내년도에 북한 핵 문제 대처 예산이 올해보다 10% 이상 감축된 7억 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보면 6자회담이든 북한이 주장하는 어떤 다자회담이 되든 북핵 관련 회담들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예산을 좀 더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재부 예산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좀 증액을 결의해 주시면 우리가 예결위를 통해서 또 증액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송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위원 외교부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지금 제가 대학가의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말이지요. 앞으로 자기가 외교를 통해서 국가를 위해 일을 하겠다는 젊은이들의 상당히 낙담 섞인 반응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한국에서 직업외교관이 되어 봐야 중요한 나라들과 하는 외교는 정치인 출신이나 다른 데서 하지 외교부 들어가 가지고 그런 것을 못 한다, 아주 비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아주 낙담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대학가 클럽에, 소위 인터넷 카페에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에 대해서 외교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그것은 장래를 보는 젊은이들이라면 이것은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영원히 4강 대사는 또 주요국 대사는 다 정치인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 그에 필요한 사람을 그 시점에 임명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 임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송민순 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의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대사를 임명하는 이 행태는 상당히 퇴행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외교역사를 잘 알고 계시는, 수백 년의 외교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다 직업외교관의 중요성을 인정을 해서, 인식을 해서 주요한 나라들에 대해서, 특히 자기 나라하고 이해관계가 높을수록 훈련된 직업외교관들을 보내서 국가의 대외관계나 안보·경제 이런 것을 다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느닷없이 지금 와서 주요 국가 대사가 전부 비직업외교관, 정치인 임명으로 이렇게 하는, 다른 나라에 전례가 없는, 수백 년의 외교역사를 가진 나라에도 아무 사례가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 아주 개탄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 지금 우리가 중요한 논의들도 있습니다마는 북한 핵 문제라든지 남북한 관계, 한반도 문제, 장래 이런 데 대해서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북한 핵문제라든지 이런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전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도 없는 분들만 지금 다 4강에 가 있지 않습니까? 4강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나라들이.

물론 장관님께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중요한 나라의 대사들을 또 그렇게 보낼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지금 핵문제에 대해서 '핵'자를 아는 대사가 누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줘요.

핵문제에 대해서 단 한 달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일을 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이 지금 4강에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오늘날의 외교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통신수단도 발달돼 있고 또 대사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거기 차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조화해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민순 위원 유 장관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차석 보고 대사하라고 그러지 왜……

지금 우리가 중국·일본·러시아·미국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 아니면 둘 중의 하나는 핵문제하고 한반도 문제 장래를 그 나라들하고 어떻게 잘 협조를 이끌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차석한테 맡겨 놓고 일을 할 수는 없겠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좀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야 되고 특히 젊은 학생들이 한국 외교관으로 지망해 봐야 내가 갈 수 있는 데는 뻔하구나, 그냥 좀 어정쩡한, 어정쩡하다는 말이 그렇습니다만 중급 외교관, 대사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낙담을 안겨 줘서는 저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왜 우리 한국 외교부 주변에 4강 대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없습니까? 충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편협하게 골라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미국도 그렇고 미국의 주일대사나 주중대사는 대통령의 측근 또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사를 보내는 그런 예도 많고 우리도 대중 관계, 대러시아 관계가 중요할수록 그런 차원에서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는 대사관이라는 것이 다 조직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민순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G20 하고 있고 G20가 잘 성공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은데 G20 국가 중에서 엽관제를 선택하는 미국 외에는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외교 인사 패턴이 없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아시고 대통령께도 잘 그런 것을 인식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9일날 한미정상회담 하시게 돼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송민순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동안에 논쟁이 많이 됐던 '그랜드 바겐'이다 이런 이름은 이번 정상회담 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미 간에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다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내 이름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보다는 한미 양국이 핵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공통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또 미국은 미·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북한한테 인식을 시키고 우리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서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한테 입력을 강하게 시키고 해서 거기에 또 한미 간에 조율이 잘 되면 힘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호보완 작용하는 이런 틀을 만들어 가야지 한미 간에 이게 내 이름이다 네 이름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 뒤에 계속 토가 달리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나는 원래 포괄적으로 했는데 미국이 또 컴프리헨시브(comprehensive), 그랜드 바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그러한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는 적절한 것 같지 않고요.

이번 정상회담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또 그것은 한미 공동의 작품이고 전략이다 그래서 이름도 같이 붙이고, 공동의 전략이면 이름도 같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전략을 가지고 2개 3개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전혀 이견이 없고 얼마 전에 워싱턴에서도 국무성 고위관리, 백악관 인사가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 방한 시에도 아마 한미 간에 서로 이견이 없다 하는 점에 대해서 확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민순 위원 그러면 이견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한미 간에 앞으로 이러한 이름으로 쓰기로 했고 이러한 간판을 달아서 한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정부가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안 그러면 국내에서 계속 논란이 뒤를 이을 것입니다.

지금 어제 오늘도 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왔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미 FTA 말씀이지요, 지금 외교부에서 판단하시기를 우리의 자동차시장이 미국과의 자동차 경쟁에 있어서 공정한 레벨 플레잉 필드(level playing field)가 안 됩니까? 지금 공정한 경쟁 아닙니까? 공정하게 다 하고 있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럼요.

○송민순 위원 그런데 왜 미국에서 커크 USTR 대표 같은 사람이 한국의 시장이 잘 열려 있지 않고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왜 분명한 설득을 저쪽에 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퍼셉션(Perception)의 문제인데 사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자동차가 싸도 안 산다든가 이런 식의 기사는 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퍼셉션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에 대한 것, 과거에 외제차를 사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허황한 근거 없는 소문들, 실제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퍼셉션의 문제가 좀 부작용을 나은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한미 간에 이것은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런 선입견을 없애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민순 위원 FTA 문제에 관련돼서 조금 이따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신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비염이 심해 가지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말을 최소화하고 일방적으로 시간을 최대한으로 쓰겠습니다.

우선 제가 서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질의가 나와서……

우선 온두라스에 있는 한지수 씨 사건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 당시에는 아마 장관님이 안 계시고 차관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같은 질문에 전혀 진전이 없는 답변을 장관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데요, 다만 보도에서는 한 가지 진전을 봤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지난달에 사망한 여성의 부검 보고서를 입수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신낙균 위원 그리고 거기에 서중석 법의학부장으로부터 이것은 과학 살인으로 그러니까 부검의가 사인을 살인으로 만들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도 확인하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구체적인 근거까지는 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래서 이런 정도의 진전이 있으면 오늘 아침 조금 더 진전된 답을 주셨으면…… 질문하신 분은 제가 이미 26일날 이런 같은 질의를 한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하실 수 있었지만 외교부에서는 진전된 답변을 하셨어야 옳다고 보고 그 구체적인 것은 예산에 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을 주십시오.

우선 올해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지난번에 제가 짚어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짚었습니다만 처음 시도되기 때문에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한 사업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그런데 ODA 사업 중의 하나인 국내초청 연수사업만을 성인지 예산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외교부에서 1건만 했다는 것이…… 외교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는 단순 검토만으로도 4건이 가능했습니다, 남녀 수치로 그냥 간단하게 나온 것은.

그런데 이렇게 1건만 올리신 게 의식이 부족한 것인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취급한 것인지 둘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변화를 주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인지 정책을 추진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0년 OECD/DAC 가입을 앞두고 이것을 저희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2011년에는 예산 편성에서……

제가 서류로 내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고 나타낼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대외직명대사 활동사업이라든가 JPO 사업이라든가 글로벌리더십 장기수련 사업 그런 것을 몇 가지 지적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부터 이것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부가 2010년도 ODA 사업 예산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12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신낙균 위원 그런데 외교부 ODA의 성주류화 예산은 반면에 감소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44억원이 감소됐는데 여성부는 여성만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ODA 성주류화 사업을 여성부가 한다고 하셔도 안 되고 여성부로 넘겨도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ODA 사업하면서 KOICA가 여성팀을 폐지하면서 이렇게 삭감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ODA 성주류화 예산을 늘려야 되는 데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제가 좀더 구체적인 지적을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건만 짚고 넘어가면, 이것 역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번 국감을 문화외교를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외교부의 공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역 대사관 감사에서도 그렇고 본부 감사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그 공감이 매우 허상인 것을 이 예산안을 보고 허탈하게 느낀 것입니다.

오늘 보고에서 보면 외교부 예산 편성 방향에도 성숙한 세계 국가 구현을 목표로 한다고 4대 사업 중의 하나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세 번째로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문화외교에 대한 예산을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특별히 외교부에서 문화외교를 실천하는 핵심부서가 문화외교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새로 된 예산 그러니까 글로벌 인적 인프라 구축이라고 신규사업의 600억을 제외하면 다른 것은 특별히 쌍방 문화교류 이런 것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문화외교의 중요성하고는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실천하는데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 매우 실망하면서 좀더 적극적인 외교부의 대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가 이미지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제시대에 외교부의 소프트파워를 위한 외교는 매우 미약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시정을 또 대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녹아 있다는 것까지 제가 감안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이범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제가 지난번 국감 장관님 안 계실 때인데 이제 재외공관의 역할도 영사외교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관은 과거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정무외교 문제도 있고 해서 1인 공관, 3인 공관 등 특수한 사정하에서 설치된 공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가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 외교 인력도 재외공관도 조직개편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109개의 대사관이 있고 총영사관이 4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3000만을 가진 캐나다는 94개의 대사관에 134개의 총영사관이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의 2배가 넘는 총영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외동포 700만 또 우리 국민의 1년 해외출국이 1000만 명에 이르는 시대에 있어서 이제 외교의 방향도 바뀌고 재외공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진 기지가 돼야 된다, 구태의연한 이런 정무외교 중심의 수동적인 재외공관의 역할로서는 안 되고 전초 기지로서 우리 재외국민 보호와 출·입국하는 우리 국민들 신변보호에 적극적인 외교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오전에도 온두라스 사태, 그게 온두라스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온두라스입니다.

○이범관 위원 그 사태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다 이것이 연관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선택과 집중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영사 외교 역량도 특히 강화해야 된다, 우리 재외동포가 많이 살고 거주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출·입국이 많은 지역에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외교 인력을 배치해서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우선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순회영사제도 있지 않습니까? 국감을 다니면서 보니까 순회영사제도가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원 예산을 보니까 2006년도에도 20만 불, 2007년도·2008년도에 27만 불, 금년에 한 23만 불 이런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아주 형식적인 것이지요. 순회영사제도를 둔 이상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인 재외국민 보호에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 좀 질문하겠는데 순회영사제도에 대해서 아무런 지침이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순회영사제도를 운영하라……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 순회영사제도는 지역이 넓은 나라의 경우 지방에 총영사관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대사의 책임하에 필요성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본부에서 특별히 지침을 제정해 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우선 한시적으로라도…… 제가 몇 군데 예를 들어드리겠는데 미국 아틀란타의 경우에는 인원을 전부 다 합쳐도 재외동포 7만 3000명에 영사 1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영사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거기에 주재하고 있는 재외공관 직원들을 거주 동포들로 나누면 아틀란타의 경우 7만 3000명, 뉴욕의 경우 6만 9000명, LA 5만 7000명, 휴스턴 5만 3000명, 시카고 4만 명 이렇습니다.

몇 군데라도 집중하셔서 순회영사제도를 제대로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순회영사제도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래야 예산이 나오지요.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이십만 불, 몇만 불 해 봐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낸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도 아니지요. 그 점에 대해서 실질적인 순회영사제도가 활용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사업무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에 외통부에서 대한민국 재외공관 만족도 조사 분석이라는 것을 한 일이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이범관 위원 수년간 해 오신 것은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셔서 하셨던데 상담 내용의 만족도, 서비스 신속도, 친절도, 정보접근성, 4개 평가 분야를 둬 가지고 수년 동안 매년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이런 평가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우선 설문지를 배포하는 방식이 말이지요, 이게 지금 한인회를 통해서 하거나 재외공관에 찾아오는 민원인을 통해서 하거나 하는데 아주 부실합니다. 설문 배포 자체가 한정된 사람들이 과연 그 설문지를 받아서 제대로 응답자들한테 나누어줘서 하는지 여러 가지가 의문 가는 점이 많아요. 이런 식의……

그리고 해외 여행객이 한 1000만 명 되는데 여행객이 설문에 응한 것은 전체 구성 비율의 2.5%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설문 배포 방식도 좀 어설프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회수를 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보통 국내에서 각 기관이 민원 업무에 대한 일반 민원인들의, 국민들의 만족도 조사는 우편으로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어서 우편으로 보내주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뭐 '2분 내에 응답해 주시오' 이런 것도 있고 과연 어떤 식으로 설문을 조사해서 회수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우선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설문조사에 의해서 나온 것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영사서비스가 부족하다' 그게 행정대학원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42점 몇%가 '영사 조력이 부족하다' 그런 응답을 받은 걸 자료를 봤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부족한 것이 영사정보, 영사업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박진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예, 그 이후에 민원업무 처리도 좀 불편하다 이런 여러 가지 민원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용역을 줘서 이런 결과를 받으셨으면 이것에 대한 개선 대책을 세워서 재외공관에

지침을 내려보낸 일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영사국장 답변 좀 부탁, 허락해 주시면……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장 이정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공관의 의견을 받아서 올해도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는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잘 점검을 해 가지고 지침을 내려보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내려보내세요. 이거 용역 줘 가지고 받아만 놓고 서랍에 집어넣어 놓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기서 지적된 사항을 외교부가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지침을 만들어서 내년 우리 상임위, 금년에는 어려울 테니까 상임위 때 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것에 따라서 얼마큼 개선해 나가겠다는 지침을 내리셨는지.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장 이정관 예.

○이범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황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震夏 委員 외교부장관님 포함해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며칠 안 남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내일모레입니다.

○黃震夏 委員 그런데 이번에 정상회담이 몇 번째가 됩니까, 오바마 대통령하고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네 번째 되나요, 다자 세팅해서 한 것 합하면……

○黃震夏 委員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사정을 봤을 때.

그리고 서로 의제 설정도 다 돼 있고 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제가 몇 가지 특별히 여쭈어 보고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지금 북한 핵에 대해서, 앞으로 진전 시킬 것에 대해서 논의가 분명히 되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공조를 분명히, 6자회담 복귀하는 문제하고 북·미 대화를 우리가 양해할 수 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정상회담에서 기대되는 것은 어떤 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목적, 골(goal)을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黃震夏 委員 마침 일본과 중국을 거쳐서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기 때문에 이런 6자회담 틀 내에서 지금 러시아만 빠지고 다른 나라 정상을 다 만나고 오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이번 APEC에서 싱가포르에서……

○黃震夏 委員 러시아도 만났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미국하고 러시아가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주 확고한 공조 체제라든지 앞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또 한미 간에 공조를 확실하게 다지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다음에 한미 FTA 문제가 요즘에 조금 진전도 있는 것처럼 얘기도 나오고 지난번 정상회담 때 양국 대통령께서 FTA 진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 이렇게까지는 약속이 돼 있었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런데 한미 FTA는 지금 우리가 동시 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히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쪽에서의 FTA가 아니고 우리가 미국하고 하는 FTA는 보다 포괄적인 그런 동맹관계로 또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하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뭐랄까 메커니즘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黃震夏 委員 이런 점에서 이번에 FTA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무슨 의원들이 여야 합해서 44명씩 해서 88명이 서한도 보냈다 이런 등등이 나

와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정부도 의지를 가지고 미측에 설득할 것은 하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도 분명한 답변을 받아 내거나 진일보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로드맵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황진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북핵 문제, FTA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또 한 가지 저희가 아프간 파병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결정을 했습니다. PRT를 보내면서 경비 병력을 보내는 쪽으로 해서 아프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정부가 결정하고 실사단까지 검토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아프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한미 간에 여러 가지 다른 뭐랄까 미진한 문제들도 진일보하게 어떤 대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꼭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요즘의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핵 말고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NLL 문제입니다. 그런데 NLL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군사령관이 쳐 놓은 선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반대를 하고 또 미국도 어떤 때는 이걸 얘기하기가 약간 거북스러운지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NLL 문제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하고도, 어떻든 재래식 방법에 의해서 어떤 긴장 고조되는 중에 상당히 빈도가 잦은 곳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하면서 미국과 유엔의 어떤 담보를 받으면서 여기에 안정을 가져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상회담 때 NLL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가 계획돼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NLL의 탄생 자체가 6·25 직후에, 1950년 6·25 직후에 된 것이고 미국은 거기에서 아주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NLL은 지금까지 60년간 지켜온 것이고 북한의 이런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경고를 발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래서 이번에 NLL 사태가 좀 있었던 직후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북한이 사태를 오판해 가지고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에 확실한 이런 방어체제,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표현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주문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다음은 예산에 관해서 간단간단하게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북·미 간에 양자회담 등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6자회담 관련 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에 7억 9200이 돼 있던 것이 내년도에는 7억 1200만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이 이유가 뭔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기재부하고 예산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그러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하니까 또 추가적으로 그것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래서 물론 6자회담이 상당히 오랫동안 안 열렸지만 열릴 것을 예상했을 때 증액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탈북자 보호 및 국내 정착 유도 강화를 위해서 민족공동체……

한 1분 더 있는 것 아니에요?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명목으로 해 가지고 09년도 18억 대비 해 가지고 14배나 증액이 된 256억을 신청했었는데 이게 63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폭증액을 했다가 대폭 깎여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게 좀 깎이면서 제가 찜찜한 것은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이라는 게 다른 것 조정하다 보면 확 깎아도 된다, 오히려 그래서 경시된 시각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외교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담당국에서 답변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예.

○외교통상부평화외교기획단장 허철 평화외교기획단장 허철입니다.

이제까지 탈북자와 관련해서 예산을 가장 많이 사용한 연도가 작년의 경우에는 33억 정도 됐습니다. 올해는 최대 63억 정도로 보고 예산을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 과정을 보면 그렇

게까지는 집행이 안 되고 내년에는 63억 정도만 하면 일단 저희가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많이 신청을 했던 이유는 단순한 탈북자 이송사업을 떠나서 탈북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주변사업들을 관계국들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별도로 구분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이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黃震夏 委員 그게 63억 가지고 괜찮다, 일단 이게 괜찮다 이거예요?

○외교통상부평화외교기획단장 허철 예, 일단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사항들이 있는데 서면으로 하거나 제가 차후 질의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서울 강동갑의 한나라당 김충환 위원입니다.

최근에 해외동포들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우선 투표권에 부여되는 것과 관련해서 우편투표제도가 꼭 필요하다, 그것이 없으면 실제로 투표율이 2%, 3%대도 유지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국적제도에 있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중국적제도가 시급히 돼야 된다, 특히 미국에 있는 유태계 미국 시민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 동포들은 200만 가까이 되지만 투표권 가진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실제로 한미관계 또 미국 내부에서 동포사회의 영향력이 너무 적다, 이런 문제 그리고 동포들의 여러 가지 복지와 민원 또 행정적인 지원을 위한 역할을 위해서 동포청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강력히 하는 것을 청취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을 한번 간단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우편투표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게 바로 외교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국회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국회에서도 별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중국적제도는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스라엘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역사적인 게 다르지요.

유대는 이미 벌써 다른 나라의 제3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국적을 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포기 안 하고 해외 제3국의 국적을 갖겠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역사적인 연유가 다르고, 또 이스라엘인들이 해외에서 자기네 살던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국적을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가서 병역·납세의 의무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역사적 근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특히 병역의무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동포청 문제에 대해서는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동포청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할 경우에 실익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국회에서 결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시대이고 또 한국이 어쨌든 선진국이 되는 데 있어서 700만 동포들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 LA에 김영옥 초등학교가, 그런 이름을 가진 초등학교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LA 시내 공원에 아주 좋은 벽이 하나 있는데 그 벽에 한국의 위인들을 새긴 부조 동판을 교민들이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되면 미국 사회에서, LA 지역사회에서 한국의 동포 또 한국 국민의 이미지 이런 것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약 20만 불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한다면 동포재단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것은 동포재단에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만 그 말씀은 금시초문이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충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반영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김충환 위원 일본에 하토야마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와 좀 다른 새로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장관님 들어 보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김충환 위원 거기에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한 1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지난번 국정감사 갔을 때 대사께서 강력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시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대사관저에 가면 당초에 아주 설계가 잘 되어 있었는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말하자면 입구에 대문 역할을 하는 그것을 하지 않아서 비가 오는데 각국의 대사들 또는 귀한 손님들이 왔을 때 비를 맞으면서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아주 어렵다고 하니까 그 예산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한번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김충환 위원 관민문화협력사업 이 내용을 보면, 한국국제협력단의 PPP사업이 관민협력사업이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포지원사업도 관민 문화지원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동포재단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애틀 샛별문화원의 도서관 건립사업에 워싱턴 주정부에서 30만 불을 일단 지원했고 또 동포들이 지금 50만 불을 추가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국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어렵다면, 원래 30만 불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일부라도 지원이 됐으면 하는 희망인데 거기에 대한 동포재단 입장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그 분야가 저희 재단 사업과 일치하는지 그동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직 검토가 종결되지 않았는데 좀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충환 위원 미국의 요구는, 동포이면서 미국 정치인이신 신호범 의원이 노력을 해서 워싱턴 주정부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모국에서도 거기에 조금 성의를 보여 주면 사업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아까 튀니지아 KOICA 사무소에 대한 질의가 다른 위원님한테서 있었습니다만, 지금 KOICA의 사업과 예산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예.

○김충환 위원 그러면 인력증원 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습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지금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70억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재정부 행정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국의 KOICA 사무소에 직원이 하나 나가 있는 데가 많은데 기재부와 협의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아마 긍정적으로 인원이 조금 추가 배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교섭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하여튼 적정 인력이 배치돼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또 만약 그 인력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사요원들 중에서 능력있는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장관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미 FTA의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 주면 FTA를 잘 완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입장을 외교부가 항상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회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추진을 해서 완결하는 게 좋은 것인지,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수차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국익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점, 두 번째로는 이것이 2007년 6월

에 서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기간 계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빨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욱 위원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G20이다, ODA 확대, 여러 가지 선진외교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인프라뿐만 아니라 콘텐츠, 특히 풀뿌리 레벨에서는 선진외교로 가는 길이 매우 험난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예산에도 많이 반영이 돼 있는데, 우선 국제기구분담금에 대해서 PKO 분담금은 현재 체납액이 얼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 금년 말까지는 1.5억 불 정도입니다.

○홍정욱 위원 일단 기재부에서 현재 체납액을 내년까지는 해소토록 책정을 해 줬는데 그 얘기는 결국 내년에 발생하는 신규 부담금은 또 체납이 되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1년씩 체납하는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지난 10월에 유엔이 발표한 PKO 분담금 체납 실적을 보면 우리나라가 5위입니다. 그렇지요? 일본, 미국, 스페인,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대규모 체납국가인데 체납 규모가 적지 않아서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의 외교적 위상을 위해서라도 체납액을 당장 내년에 해소하기는 힘들어도 2분의 1씩 해소하겠다고, 몇 년 안에 해소하겠다는 전략적인 모양은 분명히 우리가 그려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기재부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국제기구분담금 체납 해소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JPO 관련해서 올해 예산을 보면 2차 연도 5명, 1차 연도에 2명, 그러니까 결국 새로 보낸 사람은 2명밖에 없는 거지요. 정말 처참할 정도로 흉한 일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JPO 관련해서 예산 부족을 지적했는데요.

그래도 작년에는 최소한 1차 연도에 5명을 보냈는데 올해는 1인당 액수도 14만 불에서 11만 불로 줄고 또 신규 파견도 5명에서 2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홍정욱 위원 제가 국감 때도 지적했지만 일본은 국제기구 진출 지원예산이 160억 원으로 우리나라의 14배에 해당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JPO 인력도 88명, 우리는 10명에 불과하고 유엔 직원도 일본은 700명, 우리는 260명에 불과한데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재직하고 계신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위상 강화에 가장 중요한,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최소한 2차 연도 5명, 1차 연도 5명이라는 현상유지는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홍정욱 위원 세 번째로 방금 전에 김충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제협력단 인력에 관해서도 우리가 국제협력단 봉사단원 파견 규모도 계속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증액하는데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관리하는 관리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지금 봉사단이 2500명인데 관리인원은 18명, 그러니까 한 사람이 140명을 관리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봉사단원들이 현지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잦고 또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우리 봉사단원들이 불미스러운 사고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우리가 인력을 확대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사회에 제대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정수준의 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을 예산에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자외교를 보면,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이라는 신규 편성된 항목이 있습니다.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시의적절하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거 국제기구국의 기본경비 예산에 유엔총회 참석 같은 이런 기본적인 예산은 원래 편성이 돼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홍정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편성한 예산은 분명히 기존 경비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업 분야를 추진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간주해서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홍보예산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대변인실 예산을 보면 신규 예산으로 영어스피치대회를 해 놨습니다. 대국민 접촉하고 이미지 개선하겠다라는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기존에 여러 매체나 여러 기구들에서 영어토론대회, 영어스피치대회 아주 우후죽순처럼 많은데 굳이 외교부에서 차별성이나 실효성 없이 이런 대회를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대변인이 좀……

○홍정욱 위원 대변인 계세요? 대변인 나오셨어요? 아니신가……

그러면 나중에 제가 한꺼번에 물어보겠습니다.

영어스피치대회에 대한 예산하고 또 대변인 교류사업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대변인이 중국과 일본에 가신다는데 다른 파트 담당자들이 오가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대변인들끼리 교류하는 게 외교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홍보예산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위상 전파하기 위해서 해외 언론에 역량을 집중하고 국내적으로는 ODA 증대, 기여외교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지 이미지 개선, 대국민 접촉 이런 것이 과연 우리 홍보예산 증대의 주요한 명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평화연구원에 대해서도 지적하겠습니다.

지난해 예결소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주평화연구원 예산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올해 예산 4.5억, 그래서 7억에 비해서 한 2.5억 감소했는데 격년마다 열리는 제주평화포럼이 내년에 열리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거기 2억 원을 썼으니까 사실상 예산이 5000만 원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분명히 민간기금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실천을 하라, 적극적인 실천을 하라는 부대조건을 붙인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예산소위 전까지 기금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그리고 4억 5000의 예산이 어디에 쓰일 것인지, 충분한 근거자료를 확보해 주시지 않으면 부대조건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외공관 인력에 대해서도 짚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재외공관 현지인 행정원 역량 강화라는 명목으로 100억 원이 신규 편성됐지요, 장관님? 인원수하고 인건비가 어떻게 확대됩니까, 100억 원을 통해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현재 재외공관의 행정원 조직을 다 바꿔 가지고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현재는 뭐가 문제냐 하면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실질적인 일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고급인력을 확충해서 필요한 공관에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홍정욱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행정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채용하신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면 재외공관 인력 관련 예산이 기타 공관 공통운영경비, 현지인 행정원 역량강화, 에너지보좌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3개로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국회 예산 관할이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인력 충원할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항목으로 하시면 저는 투명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일반 행정예산은 카테고리가 정해져 가지고 거기서 단가, 예를 들어 고용수준을 높인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 전문직 고용은 특수직으로, 그런 전문서비스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특수한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차별화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일반 행정원 전체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적인 측면에서 카테고리를 이렇게 분류한 것입니다.

○홍정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변인실이나 공보실장 있으면 대답해 주시지요. 영어스피치대회하고, 대변인 교류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지요.

○위원장 박진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정책홍보담당관 김병연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책홍보담당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교부장관 주최 영어스피치대회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홍보 활동에 있어서 좀 부족했던 점이 국민들이 참가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외교부장관 주최로 영어스피치대회를 기획했고요.

특히 주요 외교사항을 주제로 스피치 대회를 하는 경우 많은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G20을 주제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소요 예산이 얼마예요?

○외교통상부정책홍보담당관 김병연 2400만 원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2400만 원?

○외교통상부정책홍보담당관 김병연 예, 스피치대회 2회에 2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게 대변인 기자단 교류사업인데요, 저희 홍보예산 자체가 사실 100% 홍보예산은 아니고 대변인 기자단 교류사업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인사교류사업하고 활동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계속 포함돼 있어서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고요. 이 자체는 일단 홍보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예산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인적교류 이것 다 예산이 얼마예요?

○외교통상부정책홍보담당관 김병연 4500만 원 정도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하여튼 다시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그 필요성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박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1차 질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계시고, 그다음에 다섯 분이 추가질의를 신청하셨는데요.

장관님, 오늘 중요 보고 일정이 잡혀 있다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위원장 박진 몇 시입니까, 그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5시입니다.

○위원장 박진 그러면 정동영 위원님 7분 질의하시고 한 15분 남는데요.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를 하셨는데, 차관을 불러서 저희가 차관한테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장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당 3분씩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시간 일정이 조정됐기 때문에 좀 요점정리를 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아침에 얘기했던 온두라스 한지수 씨 얘기 좀 더 해 보고 싶은데요.

저한테 이런 보고서를 보내 주셨는데, 재외동포영사국장 나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장 이정관 예.

○정동영 위원 정부가 개인에 대해 보증할 수 없다 그런 원칙이 어느 법에 있어요? 무슨 법입니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장 이정관 아니요, 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정동영 위원 법에 없는데, 그런 원칙이 누구 원칙입니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장 이정관 저희가 재외국민 보호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관이 법적 강제력이 없는데 신병을 확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동영 위원 국장 들어가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가 사실 정 위원님 질의를 아침에 받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의 논리를 떠나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국민이 세금 내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 하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정부나 국가가 있다는 존재감을,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는 우리 국민을 풀어내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동영 위원 온두라스 대사 지금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김순규 대사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미국 같으면 지금 SOFA까지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그 범죄에 연루된 자국민인 미군의 신병을 자기들이 보호하고 재판할 때만 내놓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례가 없다는 것 하나 하고, 정부가 개인에 대해서 보증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법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례에 따르면 책임은 없지요. 그런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우리 재외국민 보호 못 합니다. 우리 재외동포영사국장께서도 자세를 좀 바꾸시는 게 좋겠고……

어쨌든 이 한지수 씨는 1년 전에 참고인 조사를 다 받고 풀려났단 말이에요. 났는데, 그 사이에 부검보고서가 재작성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지금 이 보고서에 조작된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근거가 재작성된 이 부검보고서에 따른 것인데 이걸 사실 물설고 낯선, 지금 그 가족인 아버지가 가 있는데 그분에게만 맡겨 놓는 것은 나는 '우리 정부가 왜 있어야 하는가?' 이런 원론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예산을 다룹니다마는 외교부 예산 더 줘야 한다는 건 '그러면 우리 국민이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좀더 안전할 거다.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서비스를 받을 거다' 이런 기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사실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보도되지 않은 채 우리 관심 밖에서, 사각지대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많은 우리,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교부장관께서 좀 각별하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좋으신 지적으로 알고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이 한지수 씨 신원보증에 관한 문제는 장관께서 책임지고 해결하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다만 담당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려운 것은 그럴 경우 본인이 재판을 안 받고 제3국으로 갔을 경우 우리 정부와 그 나라 정부하고의 신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제3국에 가서 그 사람을, 신병을 확보해서 출두시켜야 되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차원을 떠나서 신의성실의 차원에서……

○정동영 위원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여권도 다 빼앗겼을 텐데 어떻게 제3국으로 갑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걸 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 전례.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걸 감안해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무슨 법적인……

○정동영 위원 아까 말씀처럼 전례가, 전례를 따르면 공무원은 안전하지요. 그런데 이건 전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국민이 지금 억울한 살인혐의의 누명을 썼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신원보증 했다가 나중에 제3국으로 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거기에 대한 책임 뭐 이런 걸 들어서 신원보증을 회피해 왔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화나거든요. 그런 데서 외교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나는 이럴 때 우리 국민을…… 국민들이 '아, 외교부가, 역시 정부가 내가 위급했을 때…… 내가 세금 낸, 내가 국가를 위해서 군대도 갔다 오고……', 이런 의무를 다한 데 대한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 문제와 함께, 기왕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해외국감 때 시드니하고 일본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일본에도 한 200여 명 수감자가 있습니다, 한국 국적의. 물론 영사들이 정기적으로 면회는 한다고 합니다. 호주도 백몇십 명…… 특히 요즘 워킹홀리데이, 지금 수감자나 제소자의 절반이 워킹홀리데이로 젊은 청년들이란 말이지요. 가서 운전도 서툴고 물정도 모르기 때문에 현지 법률을 위반해서 투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통상적이고 형식적인 서비스 말고 정말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한지수 씨 경우 이외에도 가령 정부가 보증을 서서 불구속 재판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케이스가 일본이나 호주나 다른 나라에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더 적극적으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부분을 장관께서 챙겨서 제도개선도 하시고 진두지휘도 하셔

서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을,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분이 다섯 분 계십니다.

우선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미국 중심으로 외교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은 참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4강외교 해서 미국·중국·러시아·일본 얘기를 하는데 말이 4강외교이지 러시아는 상당히 소홀하다라는 생각을 이번 예산 편성에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년이 러시아 수교 20주년 맞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런데 러시아하고 우리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해에 제가 대정부질문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국정원 직원 4명 추방당했었지요. 올해도 주재 외교관 1명 추방당했고 또 한국인 3명도 지난해에 강제 출국을 당했고요. 그런가 하면 한국이 서캄차카반도 해상광구 개발권을 땄다가 그것도 취소가 됐고, 뭐 엇박자 내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서 매우 섭섭하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섭섭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년도 예산안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역외교 프로그램에서도 러시아한테 갈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 있는 외교를 해야 되고 예산에 그것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싶고요. 답변은 몰아서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효율적으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외교부 예산을 보면 그렇게 깊이 고민했다라는 흔적을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글로벌코리아 미래전략 네트워크 강화 사업', 참 이름이 길기도 해요. 그런데 이 긴 이름이 사업명만 거창할 뿐 내용이 없습니다. 이미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한번 대규모 국제회의한다고 그러면서 그 테마도 정해 지지 않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자간 경제안보 협력강화 사업' 이것도 명칭이 굉장히 긴데 이 명칭 일부러 바꾸신 거지요? '에너지자원외교 강화'가 '에너지협력외교'하고 명칭이 유사하다고 해서 바꾸신 거지요?

이것도 에너지협력외교 사업하고 사업 내용이 매우 유사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외교예산이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써야 될 곳에 적재적소의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지혜를 좀 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FTA 관련해서, FTA를 올림픽 메달 따듯이 다자 간이 아닌 양자 간 FTA를 막 이렇게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미국하고 FTA 안 되는 것은 자동차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하고 자동차 협상을 할 때는 기술표준을, 앞에서 충돌…… 자동차가 이렇게 충돌할 때의 안전성이 어떤가를 따졌지요. 그런데 EU, 유럽하고 FTA 할 때는 유럽은 측면이거든요. 측면 충돌에서의 안전성이 어떤가를 가지고 따져요.

그러면 이렇게 양자 간 FTA를 계속 체결하다 보면 우리는 엄청난 비용을 이 기술표준 때문에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한 가지 자동차 예만 보더라도 기술표준이 다른 FTA를 계속해서 이렇게 올림픽 메달 따는 식으로 체결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에 답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 박진 답변하시겠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답변은 서면으로 좀 하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박선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진 다음은 민주당의 문학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진 위원 사상 초유의 3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하고 KOICA 이사장님, 오전에 박주선 위원 질의 때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가 있는 PRT 현황에 대해서 현역군인이 없다고 아까 답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확인해 주세요. 현역군인 없다고 그러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걸…… 잠깐만요.

○문학진 위원 박대원 이사장께서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장관께서 그걸 또 확인을 하셨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문학진 위원 아니,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사상 초유의 3분 스피치입니다.

현역군인 없다고 아까 답변을 했고, 여기 위원들 다 있으니까 또 속기록도 있고. 아까 박대원 이사장은 '무슨 병역대체요원인가가 가 있지 현역군인은 단 1명도 없다' 그리고 우리 유명환 장관께서도 '그렇다'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이거 국방부 자료예요, 국방부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방부 자료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현재 재아프간 한국 PRT 현황은 총원 24명 그중에 팀장인 외교부 서기관 1명, 부팀장이 1명인데 소령입니다, 현역 소령. 의무행정장교예요. 그다음에 의료진이 15명 가 있는데 그중에 현역군인이 군의관 2명, 의정장교 1명, 의무부사관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역군인이 다 해서 몇 명이 가 있느냐 하면 5명이 지금 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미처 그때 파악을 잘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바그람에는 PRT 군의관이 5명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문학진 위원 이게 국방부 자료예요, 최근에 우리 당에 와서 보고한 자료이고.

앞으로 답변을 할 때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문학진 위원 그다음에 재외동포 참정권과 관련해서 장관님께 한번 여쭤 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어느 지역의 한인회장이 우리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자기가 한인회 선거 나가서 회장 되는데 100만 달러 이상을 썼다고 공공연하게 여러 차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거비용으로.

그래서 우리가 매우 지금 걱정을 하는 게 우리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미국이든 일본이든 어디든.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고개를 끄덕임)

○문학진 위원 이 재외동포 참정권 2012년 선거부터 실시가 되는데 이 선거 부정, 주로 금품 살포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한인사회의 어떤 유력자가 국내의 어떤 정당하고 연결이 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걸 단속하고 어떻게 할 재간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신 건지, 무슨 대책이 있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래서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좀더 신중하게 이걸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결정해야 된다는 점마저 제시를 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가장 걱정하는 것이 참정권을 발휘하는 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급히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문학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지적이시고 거기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위원 제가 질문하는데 이번 주말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KOICA 예산하고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인력이 23명이 줄어들고 팀도 32개에서 26개로 축소됐습니다, 예산은 작년보다 700억 늘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2005년 21개국 APEC회의 때 예산

이 670억 들였는데 올해 G20 정상회의 개최비용이 이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한 600억 이상 소요되는데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신규사업 10건 중에서 대테러체제 강화 및 국제안보협력,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대테러 특별경호·경비 사업이나 해외긴급 구호지원 사업과 합쳐도 되는데 전부 53억으로 나누고 3억 9000으로 나누고 1억 6000으로 나눈 이유가 뭔지……

네 번째로는 신규사업 글로벌 인적인프라 구축, 이 사업은 실제 현재 국제교류재단에서 하고 있는 인사교류사업과 중복이 되는데 왜 따로 사업을 만들었는지……

다섯 번째, 신아시아 외교 추진 50억은 기존에 있는 인적인프라 구축과 같은데 이것도 중복이 됐는데 왜 이렇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재외국민 선거기반 구축으로 예산을 5억 5000 잡아놨는데 이것은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이런 것과 상당히 관계를 갖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재외동포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작년보다 예산을 5배나 올려서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코리아 미래전략기반 네트워크 강화는 기존에 외교안보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의 활동과 상당히 중복이 되는데 왜 이것을 11억으로 분리해서 해 놓았는지……

여덟 번째, 전자여권 제조 및 개선 비용으로 올해 588억에서 내년에 690억으로 100억이 늘었습니다만 실제 발급자 기준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100억 이상 상정이 되었는지……

아홉 번째, 청사시설 보수 및 확충으로 2억 8000을 해 놨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청사시설 보수와 확충이 가능한 것인지……

이상입니다.

지금 질문한 것을……

열 가지, 하나 더 있습니다.

해외 네트워크 구축이 110억 원인데 이것이 공관장 회의 및 겸임국 출장 예산과 어떻게 중복이 되는지, 아니면 내용이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열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번 주말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아주 정확히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송 위원님 지적하신 열 가지 조목조목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주당의 송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위원 아까 FTA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전략적인 가치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강조를 많이 하는데 FTA 협상은 어디까지나 경제논리에 따라서 협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전략적 의미는 그건 또 나중에 부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미국하고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전략적 의미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너무 강조를 하면 경제논리에 입각한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좋지 않은,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념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FTA, 자꾸 미국 내에서 내용 바꾸는 것 이야기하는데 본문뿐만 아니라 부속문서든 어떤 문서든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그러한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미 우리 국회는 통과했지 않았습니까, 외통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인식을 확실히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2010년 예산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 예산을 이렇게 확대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먹고 입고 하는 아주 최소주의 접근에 의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사실 숫자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데, 내년에 3600명 정도 통일부에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우리 예산 기준은 3000명을 기준으로 해 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송민순 위원 그러면 예상대로 만약에 3600명이 되었을 때 그 600명 예산은 또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년 이렇게 예산이 모자라는 현상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싶고, 이왕 숫자가 공개가 됐으면 3600명 기준에 맞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다 주름이 가서 외교활동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좋으신 지적입니다.

○송민순 위원 그리고 환차 말씀이지요, 환차 보니까 관행이 보전해 준다는 것이 나중에 50~70%만 보전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한국학 지원사

업 같은 것도 환차가 떨어져서 안 되겠다, 또 재외공관 직원 집세도 환차가 없어서 안 되겠다, 무슨 여러 가지 교류행사도 취소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국이 국격 있는 외교를 한다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환차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최소한 사후보전이라도 100%가 보전되는 그런 장치를 외교부가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맞습니다.

○송민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ODA 말씀이지요, 아까도 강조가 됐습니다만 2006년에 KOICA 직원이 1인당 9억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에 보니까 19억이 돼요, 4년 만에. 그러면 아무래도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예산 집행을 감독하다 보면 투명성이나 효율성이나 책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KOICA의 예산별 집행인원의 적정성을 분석해 가지고 국회에다 제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 점은 저희도 매우 의식을 하고 있는데 일률적인 인원 삭감 그런 방침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가급적 다시 그건 증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이범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본 위원이 이달 초에 무국적 고려인의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과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차에 걸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무국적 고려인 문제는 불행한 우리 역사의 단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 책무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사회적인 열악한 입장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추산해서 3000~7000달러의 비용이 드는데 한 달 돈벌이가 2000달러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그게 한 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외교 교섭으로 해결하고 또 필요한 지원을 국가예산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필요한 위원회도 설치하고 또 추진 과정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그런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금년 하반기에 문제가 돼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대사관에서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심의 소위가 있는데, 며칠 안 남았지만 다시 성의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내주십시오. 예산 심의하기 전에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환차손 발생 관계 말이지요,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식으로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수석전문위원도 여기다 무슨 용역을 줘서라도 확실한 방안이 뭔지를 한번 만들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이 서면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은 박주선 위원님, 권영세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남경필 위원님, 황진하 위원님, 정의화 위원님, 김충환 위원님, 문학진 위원님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교통상부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미경 위원님, 박선영 위원님, 송영선 위원님, 송민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일 날 장관께서 출석하시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못다 하신 부분은 추가로 그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온두라스에 있는 우리 재외국민 보호 관련해서, 인권 보호 또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외교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외교통상부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끝까지 남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과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 위원(23인)

권영세	김충환	남경필	문학진
박상천	박선영	박주선	박 진
송민순	송영선	신낙균	윤상현
이미경	이범관	이상득	이춘식
이회창	정동영	정옥임	정의화
진 영	홍정욱	황진하	

○출장 위원(2인)

구상찬 정진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전문위원	허영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
기획조정실장	임재홍
동북아시아국장	조태영
정책기획국장	이 윤
개발협력국장	설경훈
문화외교국장	조대식
재외동포영사국장	이정관
다자통상국장	김기환
FTA정책국장	이태호
조정기획관	최연호
평화외교기획단장	허 철
정책홍보담당관	김병연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임성준
기획이사	김성엽
사업이사	한영희
기획조정실장	박상배
정책연구실장	김태환
총무부장	박미숙
인사교류사업부장	함승훈
문화예술교류부장	송중석
문화센터소장	윤금진
한국학사업부장	최현선
연구장학사업부장	김회길
미디어사업부장	박경철
검사역	김찬곤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박대원
이사	장현식
기획경영부장	최성호
지역정책부장	정우용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권영건
기획이사	금병목
사업이사	강남훈